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 더불어 민주당의 길

이진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19. 04.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 더불어 민주당의 길

이 진 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박 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PART

I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

더불어 민주당의 길	1
요 약	4
1. 민주화이후 정치양상	7
○ 정권교체의 정치동학	8
○ 주류교체의 정치동학	11
○ 정권교체와 주류교체의 교차	14
2. 대한민국 중심정당	17
○ 정상화 정치	18
○ 비정상 정치	23
3. 혁신적 포용의 길	29
○ 혁신적 포용 프레임	29
○ 한걸음 더	34
○ 시대교체	38

PART II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 :

더불어 민주당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49
요 약	52
1. 대전환의 시대	55
○ 민족사적 대전환	55
○ 세계사적 대전환	56
○ 문명사적 대전환	56
○ 대전환의 주도세력	57
2. 역량중심 프레임과 중심·주변정당 체제	59
○ 역량중심 프레임	59
○ 중심·주변정당체제	61
○ 주변정당화 사례 : 영국 자유당	62
3. 보수진영의 분화와 주변정당화	64
○ 90년 체제의 붕괴	64
○ 보수동맹의 해체	65
○ ‘박근혜정치’와 혁신역량의 한계	66
○ ‘수구반동화’와 포용역량의 한계	70
4. 민주당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77
○ 정당역량	77
○ 혁신의 3대 핵심역량	79
○ 혁신의 3대 실천태도	84
○ 포용의 3대 핵심역량	88
○ 포용의 3대 실천태도	93

표 목차

[표 I-1] 내년 총선, 정부 지원론 vs 심판론	15
[표 I-2] 민주당 지지철회층	22
[표 I-3] 혁신적 포용 프레임	30
[표 I-4] 시대교체 I : 건국 100년, 광복 100년	40
[표 I-5] 시대교체 II : 분단의 광복, 진정한 광복	44
[표 II-1] 역대 지방선거 5개 시도의 시도의회의원 당선자수	64
[표 II-2] 제7회 지방선거 5개 시도광역비례의원 당선자수	65
[표 II-3] 제7회 지방선거 대구 기초의원비례대표 정당득표율	65
[표 II-4] 자유한국당 2.28 당대표 선거결과	76

그림 목차

[그림 I-1] 중심정당, 민주당의 지지층	19
[그림 I-2] 메시지 구도	36
[그림 I-3] 어젠다 구도	37
[그림 I-4] 사람중심 국정철학	43
[그림 II-1] 정당역량의 요소	61
[그림 II-2] 남북정상회담 긍정평가 - 보수성향 응답층(%)	74
[그림 II-3] 정당역량의 필요성	77
[그림 II-4] 정당역량의 구성	78
[그림 II-5] 정당역량의 선순환구조	79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더불어 민주당의 길

이 진 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 목 차 |

요 약	4
1. 민주화이후 정치양상	7
○ 정권교체의 정치동학	8
○ 주류교체의 정치동학	11
○ 정권교체와 주류교체의 교차	14
2. 대한민국 중심정당	17
○ 정상화 정치	18
○ 비정상 정치	23
3. 혁신적 포용의 길	29
○ 혁신적 포용 프레임	29
○ 한걸음 더	34
○ 시대교체	38

요 약

민주화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양상은 '정권교체의 정치동학'이 작동하여 10년 주기로 정권교체가 이어졌다. 정권교체의 정치동학은 유권자가 비등한 양대 진영 지지층과 결국에는 양대 진영정당을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부동층으로 나누어진 유권자 지형을 전제한다. 야당이 잘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정권심판 부동층'에 의한 정권교체, 양대 진영을 대표하는 여야의 상시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반사이익의 정치양상을 의미한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60년 4.19 혁명, 87년 6월 항쟁에 이은 30년 주기의 유권자 지형의 근본적 재편을 암시한다.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은 양대 진영의 해체와 함께 유권자가 다수의 주류 유권자와 소수의 비주류 유권자로 양분된 유권자 지형을 전제한다. 다수의 주류 유권자가 여당은 정상화 정치를, 야당은 비정상 정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정치양상을 의미한다.

물론 정권교체의 동학과 주류교체의 동학은 상호교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로 현실화된다. 여기서 핵심변수는 촛불혁명과 이어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주류교체의 과정인지, 아니면 정권교체의 단순한 계기인지 여부이다. 다른 하나의 핵심변수는 진영을 가로질러 촛불혁명에 동참하고 한반도평화에 찬성하는 촛불 부동층과 한반도평화 부동층이 유권자 지형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오는 '주류교체 부동층'인지, 아니면 '정권심판 부동층'의 또 다른 모습인지 여부이다.

주류교체는 확장지향형 정상화 정치를 하는 중심정당과 축소지향형 비정상 정치를 하는 주변정당의 '중심·주변 정당체제', 여당이 사실상 여야의 역할을 모두 함으로써 여야 정권교체가 중심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1.5당과 야당은 수권능력을 상실한 항의정당, 생존이 우선인 불임정당으로 전략한 0.5당이란 의미에서 '1.5당체제'를 전제한다.

'대한민국 중심정당(pivot party)'은 진보진영 또는 보수진영의 진영정당(block party)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상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정당, 그래서 당연한 여당이다. 중심정당은 '하나라도 같으면 동지'라는 초심과 상식을 지키는 정당이다. 그래서 온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인배 정당', '군자 정당'이다. 중심정당은 말로 주장하지 않고 발로 뛰는 '생활체감 정치'와 당심과 민심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는 '국민공감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정상화 정치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반면, '주변정당'은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서는 비정상 정치, 정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이념이나 진영의 지지자까지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영원한 야당이다. 주변정당은 열성 지지층, 시끄러운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조용한 다수의 시각에서 몰상식한 정당이다. '하나라도 틀리면 빨갱이'라는, 그래서 같으면서 싸우는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소인배 정당'이다. 주변정당은 비정상 정치로 일관함으로써 반사이익에 골몰하여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외면하는 '생활불감 정치'와 시끄러운 소수에 영합하여 당심과 민심이 끊임없이 괴리되는 '민심불감 정치' 또는 '존재감의 정치'를 강행한다.

중심·주변 정당체제에서는 타협의 정치, '협치'가 아니라 대결의 정치, '대치'가 오히려 격화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대치의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정치를 진보와 보수의 경쟁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기묘한 공존으로 보고 비정상적 주변정당을 심판한다.

대한민국 중심정당, 더불어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통해 주류교체를 실현하는 혁신적 포용노선을 실천한다. 중심정당은 한 걸음 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정치를 정상화하는 생활체감과 국민공감을 통해 진영정당체제를 중심정당체제로 전환하는 수평적 주류교체, 즉 정당 재편성과 함께 시끄러운 소수, 정치계급의 특권구조를 타파하고 조용한 다수, 국민이 정치의 주류가 되는 수직적 주류교체, 즉 시대교체를 주도함으로써 주류교체를 실현한다.

건국 100년을 넘어 광복 100년, 2045년까지 사람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대한민국 건국세대의 꿈, '새 100년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민주당이 혁신적 포용정당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신뢰받는 과정이다.

온 국민이 승리하는 원칙 있는 협력의 국민주권민주주의 시대, 대한민국의 성취가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는 창의적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실현하는 광복세대의 꿈, '진정한 광복'을 달성하는 과정이 민주당이 시대교체를 주도하는 신주류(new mainstream)로 인정받고,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신뢰받는 과정이다.

민주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은 혁신과 포용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융합을 지향한다. 혁신은 포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동반 전진'이다. 포용은 혁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 개선하는 '전반적 상향이동'이다. 앞으로, 미래로 함께 전진하는 혁신 없는 포용은 공허하고, 위로, 함께 잘 사는 포용 없는 혁신은 맹목이다. 긴 안목을 가진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과 연속집권 없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위태롭다.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 더불어 민주당의 길

이 진 복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치학 박사)

1

민주화이후 정치양상

○ 정권교체와 주류교체

- '정권교체의 정치동학'은 유권자가 비등한 양대 진영 지지층과 결국에는 양대 진영정당을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부동층으로 나누어진 유권자 지형을 전제
- 야당이 잘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못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정권심판 부동층'에 의한 정권교체. 양대 진영을 대표하는 여야의 상시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반사이익의 정치양상
-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60년 4.19 혁명, 87년 6월 항쟁에 이은 30년 주기의 유권자 지형의 근본적 재편을 암시
-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은 양대 진영의 해체와 함께 유권자가 다수의 주류 유권자와 소수의 비주류 유권자로 양분된 유권자 지형을 전제
- 다수의 주류 유권자가 여당은 정상화 정치를 하고, 야당은 비정상 정쟁을 하고 있다고 인식.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오히려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정치양상
- 정권교체의 동학과 주류교체의 동학은 상호교차, 다양한 시나리오로 현실화
- 여기서 핵심변수는 촛불혁명과 이어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주류교체의 과정인지, 아니면 정권교체의 단순한 계기인지 여부
- 다른 하나의 핵심변수는 진영을 가로질러 촛불혁명에 동참하고 한반도평화에 찬성하는 촛불 부동층과 한반도평화 부동층이 유권자 지형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오는 '주류교체 부동층'인지, 아니면 '정권심판 부동층'의 또 다른 모습인지 여부

○ 정권교체의 정치동학

- 87년 민주화, 국민직선·5년단임 대통령제 개헌이후 5년 대통령 임기, 10년 정권교체 주기.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당계열 정당과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계열 정당이 번갈아 집권
- ‘정권교체의 정치동학’은 여야의 상시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여야 양당체제, 진영론에 입각한 양대 진영체제를 전제. 대권을 둘러싸고 여당은 정권연장, 야당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반사이익의 정치양상
- 본질은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권심판의 정치. 여당은 전임정부에 대한 심판. 그 연장선에서 야당에 대한 심판. 야당은 현정부에 대한 심판. 현정부의 지지도가 높다면 정부전제
- 반사이익의 방향은 결국 여당에서 야당으로 흐름. 그래서 정권교체가 가능
- 대통령 임기 5년은 예외 없이 전후반이 선명히 나누어진 ‘전고후저(前高後底)’의 정치 사이클
- 여권이 분열되지 않는 한 집권초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높은 지지도와 연결. 실수를 해도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실적이 나빠도 전임정부 때문이라는 생각에 집권 2년차까지 지지도 회복 가능
- 그러나 민생이 악화되고 있다고 체감한다면, 즉 ‘생활체감의 이슈’가 악화된다면 집권 3년차부터 지지도 하락 추세
- 민생이 악화되는 속에서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권력형 스캔들이 터지거나 내분까지 일어난다면, 즉 ‘국민 공감의 이슈’가 악화된다면 지지도 급락 추세
- 생활체감의 이슈는 증폭형 이슈로서 스피커의 불륨 역할. 생활체감이 나빠지면 여권에 유리한 이슈의 소리는 줄어들고, 불리한 이슈의 소리는 커짐. 민심의 공감대는 생활체감 속에서 증폭
- 집권 3년차부터 현정부에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민생의 기저효과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지면 지지도 회복 불가능. 반짝 이벤트는 반짝 반등일 뿐 민생 개선에 대한 체감 없이 모멘텀은 동력을 얻지 못함

- 국민공감의 이슈는 폭발형 이슈. 생활체감이 나빠지면서 국민공감을 잃는, 특히 권력형 스캔들은 파국적 효과. 중간평가격인 전국선거를 앞두고 또는 임기말에 발생한다면 예외 없는 패배와 레임덕
- 우리나라 전국선거는 대통령 캐릭터의 호불호가 급반전하면서 이를 응징하는 ‘정권심판 부동층’의 쏠림 투표
- 전임 대통령에 실망해 현대통령을 지지했던, 생활체감과 국민공감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평소에는 정치를 불신하는 조용한 다수이지만 한계에 이르면 욕의 응징을 하는, 선거승패를 결정하는 정권심판 부동층은 반사이익만을 노리는 정권교체 동학의 귀결이자 우리나라 정치의 역동성과 불안정성을 유발

○ ‘정권심판 부동층’의 계보

- 우리나라 대선의 기본특징은 정권심판. 여당에 대한 지지철회 선거, 즉, 정권심판 부동층의 여당지지 철회선거
- 정권심판 부동층은 지난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실망해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로서 다가오는 전국선거에서 여당에 타격을 주는 유권자, 심한 경우 ‘묻지마’ 응징투표 경향
- 정권심판 부동층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여야를 오가는 스윙보터라는 의미의 부동층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우리 지지층을 동원하는 것에 비해 2배의 효과가 있다는 점. 투표하지 않은 우리 지지층을 동원하면 플러스 1표, 우리 지지층이 경쟁정당을 지지하면 마이너스 2표
-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정권심판 부동층의 규모는 대략 25%. 이 25%의 정권심판 부동층의 향배가 대선을 비롯한 전국선거 승패 결정
- 한국정치의 양대정당, 자유한국당 계열, 보수진영의 고정지지층은 30%(2017년 대선 홍준표 후보 24.0%, 유승민 후보 6.8%), 민주당 계열, 진보진영의 고정지지층은 25%(2007년 대선 정동영 후보 26.1%), 충청·강원권 등 보수성향 비판적 지지층 10%, 진보정당 또는 새정치지지 진보성향 비판적 지지층 10%

① ‘MB 민주당원’

- 정권교체가 확실히 되었던 2007년 당시 야당, 한나라당 후보의 평균 지지도 합은 무려 65%, 이명박 후보 40%, 박근혜 후보 25%

- 2007년 대선에서 25%에 달하는 거의 모든 정권심판 부동층이 이명박 후보에게 몰표. 이회창 후보가 박근혜를 지지했던 15%의 보수성향,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을 빼앗아갔음에도 정권심판 부동층을 싹쓸이함으로써 48.7%로 압승
- 정권심판 부동층 중, 10% 정도는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새천년민주당의 분당과 이후 국정실패 속에서 여당에 실망해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MB 민주당원'

②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 2012년 대선에서 MB에게 몰표를 주었던 25%의 정권심판 부동층 중, 10%는 여전히 박근혜 후보 지지. 이 10%가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 2012년 내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60~70%에 달했지만 '발목잡기' 야당 견제에 대한 공감도 또한 60%에 이르렀음. 무엇보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가 정권교체라는데 공감하는 유권자가 50%에 이르렀음
 - ※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재창출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정권교체(50.1%)'가 '정권재창출(34.6%)'보다 많았고, '모름·무응답'은 15.3%였음.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정권교체로 보는 견해는 한나라당 지지층(53%)과 민주당 지지층(52.9%)이 비슷했음.(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 2011.6.13)
- 2002년 대선구도가 보수 대 진보의 양자택일 진영대결 구도였고, 40%의 보수진영 지지층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면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10%를 더해 51.6%로 당선
- 문재인 후보는 'MB 민주당원'을 포함, 정권심판 부동층 15%를 얻었지만 부동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진보진영의 지지층 한계로 석패

③ '촛불 부동층'

- 2017년 5.9 대선의 승패를 결정했던 핵심 부동층 집단인 정권심판 부동층은 30%~35%로 확대. 촛불혁명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이 기본적으로 80%였고, 반대는 20%.
- 촛불 부동층은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와 '진박역풍 국민의당 지지 부동층'과 '탄핵찬성 보수진영 이탈층'으로 구성. 특히 탄핵찬성 보수진영 이탈 부동층은 이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동층으로서 촛불혁명 효과. 이들이 '주류교체 부동층'인지 '정권심판 부동층'인지는 미지수
- 이중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10%는 이미 집권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동시에 새누리당 지지철회. 2016년 4.15 총선전 새누리당의 기본 지지도가 40%였고, 박근혜 대통령 득표율에서 뺀 10%가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로써 최초의 정권심판 부동층

- 새누리당의 기본 지지도가 2016년 4.13 총선전 40%에서 총선참패 후 30%로 10% 하락. 이 10%가 보수성향 비판적 지지층으로서 또 다른 정권심판 부동층이자 '진박역풍 국민의당 지지 부동층'. 이들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 국민의당을 지지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참패를 가져왔고, 기본적으로 안철수 지지층으로 추정
- 15%는 보수진영의 고정지지층으로서 4.13 총선에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촛불 혁명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한 '탄핵찬성 보수진영 이탈 부동층'. 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촛불 부동층

- 반사이익이 작동하는 선거결과와 기본성격은 내가 잘 해서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선거. 상대가 잘 해서 지는 선거가 아니라 내가 못해서 지는 선거
- 집권 전반기에는 전임정부에 대한 심판 작동, 전반기 선거는 대체로 야당의 무덤. 집권 후반기는 현정부에 대한 심판 작동, 후반기 선거는 대체로 여당의 무덤
- 야당은 정권심판 부동층이 야당이 잘 해서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란 믿음 하에 여당의 국정실패, 결국 대한민국의 실패를 노리는 '발목잡기 정권심판'
- 야당이 정권심판에 올인하기 때문에 여당이 YS, 노무현, 박근혜와 같은 전임 대통령과 결이 다른 대선후보를 내세운다면 야당은 정권심판의 타겟을 상실, 여당의 정권연장. 이것이 10년 정권교체 주기의 비밀
- 집권 전반기, 특히 2번의 대선패배 이후 야당은 절망적 폭주. 상대 진영이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국정 발목잡기. 극한적 대치국면과 정쟁유발로 자중지란 방지
- 민심을 얻기 위한 처절한 성찰과 철저한 혁신이 아니라 정치실패를 야기하는 증오의 정치와 망상의 정치는 반사이익 정권교체 동학의 폐해이자 대한민국의 불행

○ 주류교체의 정치동학

-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은 상시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대등한 여야 양당 체제가 여당이 민주적으로 연속 집권하는 호불호가 뚜렷한 중심·주변 정당체제로 전환되는 정치양상

- 주류교체의 동학이 가장 완전하게 현실화된 모습은 여야 간의 반사이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정치양상, 따라서 여야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여권 내에서만 정권교체가 가능
- 반사이익이 작동하더라도 여당은 정상화 정치를 하는 중심정당, 야당은 비정상 정치를 하는 주변정당으로 인식되는 한, 반사이익의 방향은 결국 주변정당에서 중심정당으로 흐름. 그래서 정권교체가 불가능
- 이는 진영 자체가 해체되면서 여야가 상대하는 유권자가 판이하게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치양상의 변화
- 중심정당은 자기 진영을 넘어 대다수의 유권자, 조용한 다수로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주변정당은 자기 진영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극렬한 소수 지지층, 시끄러운 소수로 지지기반이 제한됨
- 중심정당은 진영 내 지지층을 넘어 진영 밖 지지층으로까지 확대, 진영을 불문하고 온 국민이 지지하는 이슈를 주도하면서 이를 공고화
- 주변정당은 진영 간 균열만큼 진영 내 균열이 심화. 생존을 위해 소수 극렬지 지층에 집착, 진영 내 균열이 극대화되면서 더욱 협소화
- 결국 유권자의 다수가 여당을 '자연스런 여당'으로 인식, 정권교체가 여당 내에서 일어나는 중심정당화, 야당은 수권능력을 상실한 '만년야당'으로 인식, 집권이 불가능한 주변정당화
-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은 보수진영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심정당과 주변정당의 '두 개의 운동장'으로 정치양상 전환
- 기울어진 운동장은 보수진영을 주류로 인정하는 진영대결 모델, 그러나 정권 교체가 가능한 보수진영 우위의 여야 단일운동장 형상화
- 반면, '두 개의 운동장'은 주류교체를 형상화한,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정치 모델
- 기울어진 운동장은 진영론적 고정관념에 집착,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양당 체제를 상정. 양대 진영이 최대 동원하여 정면대결하면 보수진영 51%, 진보진영 49%의 보수진영 필승구도, 보수진영이 주류임을 자인
- 주류교체의 두 개의 운동장은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가 정치양상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

-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류 운동장은 탄핵과 한반도평화에 찬성하는 80%의 유권자가 관중인 중심정당의 운동장이고,
-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비주류 운동장은 탄핵과 한반도평화에 반대하는 20%가 관중인 주변정당의 운동장
- 정권교체 대 정권연장의 승자만 바꾸는 단일 운동장의 여야 맞대결 구도를 넘어 주류 대 비주류로 분리된, 유권자의 시각에서 비정상 정치를 하는 주변정당을 심판하는 두 개의 운동장
- 보수우위 기울어진 운동장의 토대는 '콘크리트 지지층'. 보수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5060의 세대 콘크리트 지지층과 영남과 강남을 두 축으로 하는 정부고속도로 지역 콘크리트 지지층이 핵심
- 촛불혁명과 이어진 한반도평화의 정치충격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파괴. 세대별로는 50대가 탄핵에 찬성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떠났고, 지역별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지층이 먼저 보수진영을 떠났고 PK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합류
- 콘크리트 지지층의 파괴는 '진영 간 유권자의 이동은 없다'는 진영론적 고정관념을 파괴
- 민주당은 진보진영만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중도층의 압도적 다수와 함께 보수층에서도 경쟁가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심정당으로 부상
-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진영을 대변하지 못하고 극단적 비정상 집단을 대변하는 주변정당으로 전락. 중도보수층까지 아울렀던 끈적한 콘크리트 정당이 태극기 부동층의 녹슨 철근만 남은 '철근 정당'으로 퇴행
- 결국 주류 운동장에서 중심정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더라도 비주류 운동장에 있는 주변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지지도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비주류 운동장은 주류 운동장의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지 못함. 주류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고서는 수권정당이 될 수 없고, 비주류 운동장에서 우승하는 것은 비정상 정치를 하는 주변정당으로 심판 받아야 함을 증명하는 꼴

○ 정권교체와 주류교체의 교차

- 주류교체의 동학은 자동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음. 못지않게 정권교체의 동학 또한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상호교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로 현실화
- 여기서 핵심적 변수는 촛불혁명과 이어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주류교체의 과정인지, 아니면 정권교체의 단순한 계기인지 여부이고,
- 다른 하나의 핵심변수는 진영을 가로질러 촛불혁명에 동참하고 한반도평화에 찬성하는 촛불 부동층과 한반도평화 부동층이 유권자 지형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오는 ‘주류교체 부동층’인지, 아니면 ‘정권심판 부동층’의 또 다른 모습인지 여부
-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가 5년 대통령 임기, 10년 정권교체 주기를 넘어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30년 주기로 한 시대를 획하는 시대교체의 혁명적 사건인지,
- 아니면 1961년 5.16 쿠데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좌절된 것처럼 미완의 혁명으로 그칠지는 중심정당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촛불 부동층과 한반도평화 부동층,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탄핵과 한반도평화에 찬성하여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신민주당 부동층이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지지 부동층으로 남을지,
- 또는 다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정권심판 부동층이 될지는 생활체감과 국민공감을 어느 정당이 얻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정권교체의 진영정당체제에서 주류교체의 중심정당체제로의 전환은 결국 주변정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중심정당이 반사이익을 얻어 주변정당의 지지도에 한계가 있는 ‘지지도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
- 이는 주류 운동장의 관중인 촛불 부동층과 한반도평화 부동층이 태극기 부동층으로 가득 찬 비주류 운동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정상 정치를 하는 주변정당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음

○ 정권교체와 주류교체의 교차효과

[표 I-1] 내년 총선, 정부 지원론 vs 심판론

(단위: %)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모름/응답거절
2015년 9월 4주	36	42	21
2019년 4월 2주	47	37	16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80	9	11
부정 평가자	15	69	16
주요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81	10	9
자유한국당	6	84	10
바른미래당	-	-	-
민주평화당	-	-	-
정의당	71	20	9
무당층	26	39	35
연령			
19~29세	49	28	22
30대	65	24	11
40대	57	31	12
50대	42	44	14
60대 이상	29	53	19
성향별			
보수	23	67	10
중도	50	36	14
진보	71	20	9
모름/응답거절	32	31	37

- 정권교체의 정치동학과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의 교차효과는 정권심판론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여부, 즉 정부심판과 정부지원에 대한 지지 여부로 판별 가능
- 4월 2주차 한국갤럽조사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에 대해 47%가 지지했고,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심판론에 대해 37%가 지지했음

- 집권 3년차 중간평가격인 총선에서 지원론이 앞서고 있는 것은 주류교체 효과가 정권심판 효과보다 높다는 점을 시사
-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1%에 불과했는데, 심판론 지지가 37%였다는 것은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면 자유한국당이 정권심판 37%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
-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심판론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긍정 평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지원론을 압도적으로 지지
- 여기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심판론(39%)이 지원론(26%)에 우세한 상황에 유의할 필요. 무당층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정권심판의 작동
- 연령별로 40대 이하에서는 지원론 지지가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는 심판론 우세. 여기서 주목할 점은 50대에서 심판론(44%)과 지원론(42%)이 박빙
- 5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39%이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8%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권심판 50대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가능성
- 이념성향을 보면 중도층에서 심판론(36%)보다 지원론(50%) 동조가 높다는 것은 주류교체 동학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점. 다만 중도층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5%로 매우 낮은 상황인데 36%가 심판론에 동조했다는 것은 정권심판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가능성
- 새누리당이 참패한 2016년 4.13 총선 반년여 전인 2015년 9월 조사에서 42%가 정부심판론, 36%가 정부지원론에 동조했고, 21%는 의견을 유보했음
-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8%, 부정률은 43%로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41%)이 새정치민주연합(23%)을 압도
-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특이하게 심판론(42%)이 지원론(36%)을 앞서고 있는 점은 이미 정권심판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 민생악화로 인해 생활체감이 나빠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총선공천을 둘러싼 내홍으로 국민공감까지 상실, 정권심판론이 '진박역풍'의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참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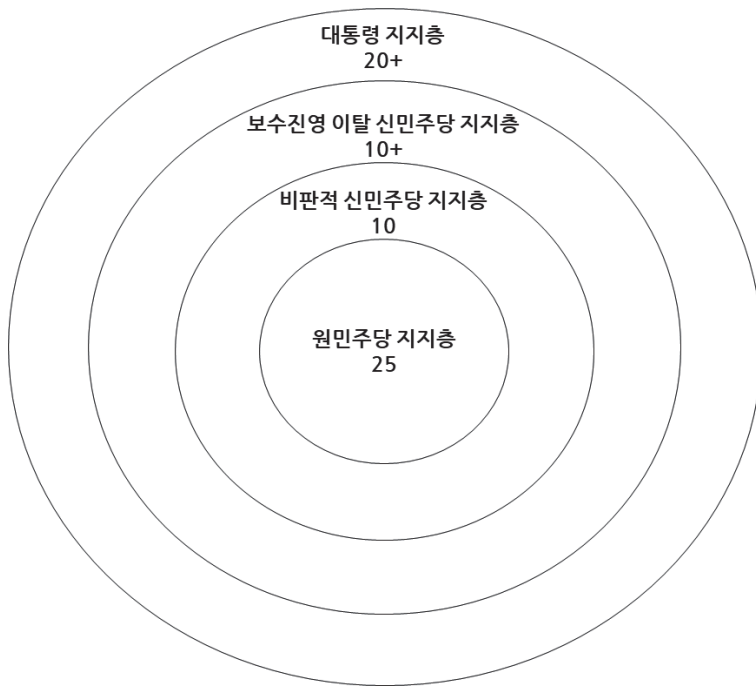
○ 대한민국 중심정당

- ‘대한민국 중심정당(pivot party)’은 진보진영 또는 보수진영의 진영정당(block party)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상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정당, 그래서 당연한 여당
- 중심정당은 초심과 상식을 지키는 정당. ‘하나라도 같으면 동지’라는 자세는 선거운동의 초심이자 상식. 그래서 온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인배 정당’, ‘군자 정당’
- 평범한 사람들, 조용한 다수와 말이 통하는 조용한 다수의 정당, 온 국민과 어울리는 ‘인싸(insider) 정당’
- 중심정당은 정상화 정치를 위해 노력. 말로 주장하지 않고 발로 뛰는 ‘생활체감 정치’와 당심과 민심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는 ‘국민공감 정치’를 실행
- 반면, ‘주변정당’은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서는 비정상 정치, 정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낙인. 그래서 이념이나 진영의 지지자까지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영원한 야당
- 주변정당은 열성 지지층, 시끄러운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조용한 다수의 시각에서 몰상식한 정당. ‘하나라도 틀리면 빨갱이’, 그래서 같으면서 싸우는, 대권보다 당권이 먼저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소인배 정당’, 시끄러운 소수의 정당
- 극소수 극렬 비정상 집단의 포로가 되어 극단적 증오와 망상에 빠짐으로써 보통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아싸(outsider) 정당’
- 주변정당은 비정상 정치로 일관. 오직 반사이익에 골몰,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외면하는 ‘생활불감 정치’와 시끄러운 소수에 영합하여 당심과 민심이 끊임없이 괴리되는 ‘민심불감 정치’ 또는 ‘존재감의 정치’ 강행
- 대한민국 중심정당은 확장지향형 정상화 정치를 하는 중심정당과 축소지향형 비정상 정치를 하는 주변정당의 ‘중심·주변 정당체제’, 여당이 사실상 여야의 역할을 모두 함으로써 여야 정권교체가 중심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1.5당과 야당은 수권능력을 상실한 항의정당, 생존이 우선인 불임정당으로 전략한 0.5당이란 의미에서 ‘1.5당체제’를 전제
- 중심·주변 정당체제는 타협의 정치, ‘협치’가 아니라 대결의 정치, ‘대치’가 오히려 격화되는 역설. 대치의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정치를 진보와 보수의 경쟁이 아니라 정상화와 비정상의 기묘한 공존으로 보고 비정상적 주변정당을 심판, 비정상의 ‘제몫 찾아주기’
- 중심정당의 분열 또는 파국적 사건으로 주변정당이 간헐적으로 집권하더라도 국정실패로 귀결, 연속집권이 불가능한 체제. 일본의 자민당주도 중심·주변 정당체제, 스웨덴을 위시한 20세기 북유럽의 사민당주도 중심·주변 정당체제가 대표적 사례

○ 정상화 정치

- 중심정당은 초심과 상식을 지키는 정당. ‘하나라도 같으면 동지’라는 자세는 선거운동의 초심이자 상식. 그래서 온 국민과 화합할 수 있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인배 정당’, ‘군자 정당’
- 평범한 사람들, 조용한 다수와 말이 통하는 조용한 다수의 정당, 온 국민과 어울리는 ‘인싸(insider) 정당’
- 중심정당은 말로 주장하지 않고 발로 뛰는 ‘생활체감 정치’와 당심과 민심을 끊임없이 조화시키는 ‘국민공감 정치’를 실행
- 그래서 중심정당은 주변정당과 대비하여 정상화 정치를 하는 자연스런 여당. 중심정당은 온 국민이 지지하는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진영을 넘어 지지기반 공고화, 조용한 다수의 정당
- 더불어 민주당은 진보진영을 넘어 사실상 온 국민이 지지하는 촛불혁명의 정당이자 한반도평화의 정당으로서 정상화 정치를 하는 중심정당. 대한민국 중심정당은 대한민국의 정상화, 한반도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당
- 중심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80%, 한반도평화에 찬성했던 80%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80% 정당’
- 80% 정당은 일상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촛불 부동층’, 역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한반도평화에 찬성하는 ‘한반도 평화 부동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정당

[그림 I-1] 중심정당, 민주당의 지지층



-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지지층은 전통적, 일상적 지지층인 ‘원(原)민주당’ 지지층과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 과정에서 새롭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신(新)민주당 지지층’, 촛불 부동층과 한반도평화 부동층을 포괄하는 민주당의 잠재적 지지층인 ‘대통령 지지층’ 등으로 구성
- 진보진영 대표정당, 민주당의 일상적 최대 지지도는 25% 정도. 촛불혁명 이전 민주당을 일상적으로 지지해왔던 최대 25% 정도가 전통적 지지층인 ‘원민주당 지지층’
- 촛불 부동층 또는 한반도평화 부동층 중,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신민주당 지지층은 20% 이상. 작년까지 민주당의 지지도는 40% 대 중반 유지. 여기서 원민주당 지지층 25%를 뺀 20%가 신민주당 지지층
- 신민주당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야권지지 부동층이지만 평소에는 지지하지 않는 주로 2030대와 수도권·호남 거주, 10% 정도의 ‘비판적 신민주당 지지층’과

- 보수진영을 지지해왔지만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 이슈에서 보수진영의 실정과 태도에 실망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주로 50대와 PK 출신, 10% 이상의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으로 구성

○ 신민주당 지지층

- 신민주당 지지층은 10% 정도의 '비판적 신민주당 지지층과 10% 이상의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으로 구성
- 작년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중반. 여기서 원민주당 지지층 25%를 뺀 20%에서 5% 정도는 수도권 비판적 신민주당 지지층, 5% 정도는 국민의당을 지지했다가 대선이후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한 호남출신 국민의당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 이를 합친 10% 정도가 비판적 신민주당 지지층
- 민주당 지지율 최고치는 작년 6.4 지방선거 직후의 56%. 나머지 최소 10%에서 20%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하고 한반도평화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주로 PK 지역의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
- 2016년 4.13 총선에서 민주당은 1당이 되었지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25.5%로 제자리, 지역구 득표율은 37.0%. 촛불혁명 이후 치러진 2017년 5.9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08%,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광역의원비례대표 득표율은 51.42%로 압승
- 후보요인을 통제하고 정당의 지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선과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득표율 참조. 4.13 총선은 25% 정도로 민주당의 일상적 최대 지지도였으며, 5.9 대선은 40% 정도였고, 6.13 지방선거는 50%를 넘었음
- 민주당이 대한민국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적이 없는 신민주당 지지층을 공고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신민주당 지지층을 공고화할 때 민주당은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또한 작년까지 60%대 중반 이상. 따라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 이상의 성과중시 성향을 가진 '대통령 지지층'이 잠재적 지지층으로 추가될 수 있음
- 민주당의 2016년 4.13 총선 승리, 2017년 5.9 대선 낙승, 2018년 6.13 지방선거 압승의 전국선거 3연승은 이를 실증

- 4.13 총선에서 야권분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승리는 새누리당이 ‘진박역풍’을 맞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보수진영 이탈 부동층이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경쟁력이 높았던 지역구, 특히 수도권에서는 비판적 지지 부동층이, PK에서는 보수진영 이탈 부동층까지 민주당으로 결집했기 때문
- 5.9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탄핵에 찬성했던 촛불 부동층의 과반수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 특히 국민대통합 행보와 메시지를 통해 안희정-반기문-안철수로 이어지는 새정치 성향을 가진 비판적 지지 부동층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
-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지만 문재인(41.08%), 안철수(21.41%), 유승민(6.76%), 심상정(6.17%)으로 분열된 촛불 부동층이 한반도평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안식처로 선택했기 때문
- 민주당의 지지도는 작년 12월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40%선이 붕괴, 30% 중반까지 떨어짐.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에 대한 지지로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게 된 신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음에 유의
- 비판적 신민주당 지지층과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 집단이고, 결국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을 포기하고 비판적 신민주당 지지층을 동원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진영론의 복원은 정권심판 자초
- 비판적 신민주당 지지층에게 ‘그민찍(그래도 민주당 찍을거잖아)’의 오만을 부리고,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에게 ‘그자찍(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거야)’의 독선을 부리는 것은 정권심판 자초
- 생활체감과 국민공감은 진영을 가로지르는 주류교체의 정치효과.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유능하면서 겸손한, 정상화 정치는 정치 본연의 목적이자 중심정당의 자세. 정치의 정상화

○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신민주당 지지층

[표 I-2] 민주당 지지철회층

(단위: %)

	2018년 6월 2주	2019년 3월 4주	
	민주당	민주당	격차
전체	56	35	-21
지역			
서울	58	37	-21
인천/경기	56	33	-23
대전/세종/충청	52	33	-19
광주/전라	80	68	-12
대구/경북	33	24	-9
부산/울산/경남	55	25	-30
세대			
19~29세	59	35	-24
30대	69	42	-27
40대	63	46	-17
50대	49	35	-14
60대 이상	44	22	-22
직업별			
자영업	58	34	-24
블루칼라	55	35	-20
화이트칼라	66	42	-24
가정주부	44	31	-13
학생	61	40	-21
무직/은퇴/기타	41	26	-15
이념성향			
보수	25	16	-9
중도	57	35	-22
진보	76	58	-18

-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작년 지방선거 직후 지지도 최고치(56%)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35%)를 비교해보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집단은 신민주당 지지층
- 기본적으로 야권지지 성향이지만 일상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비판적 지지 신민주'

당 지지층'과 중도보수 성향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에서 동시에 지지도가 하락했다고 추정 가능

- 지역을 보면, 비판적 지지 경향의 수도권에서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 인천/경기에서 23%, 서울에서 25%가 하락했고
- 보수진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새롭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큰 폭인 30%가 폭락했음
- 세대를 보면, 비판적 지지 경향의 30대에서 27%, 20대에서 24%가 하락했음. 특히 20대의 지지율이 35%로 민주당의 전체 지지율과 같고 50대 지지율과 같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보수진영 이탈 신민주당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 22%가 하락했음. 또한 50대에서 가장 적은 14%가 하락해서 35%의 견조한 지지를 보여준 것은 586세대의 세대효과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물론 50대의 정권심판 정서는 여당의 영원한 단서 조항
- 직업별로 보면, 비판적 지지 경향의 화이트칼라와 학생의 지지도가 각각 24%, 21% 하락했고, 보수진영 지지 성향이었던 자영업자가 24% 지지를 철회했음
- 이념성향을 보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경향의 진보 유권자 지지도가 18% 하락했고, 부동층 성향의 중도 유권자가 22% 지지를 철회했음. 주목할 점은 중도성향 유권자의 지지도가 언제나 민주당의 전체 지지도와 같다는 점

○ 비정상 정치

- 주변정당은 열성 지지층, 시끄러운 소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조용한 다수의 시각에서 몰상식한 정당. '하나라도 틀리면 빨갱이', 그래서 같으면 싸우는, 대권보다 당권이 먼저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소인배 정당', 시끄러운 소수의 정당
- 극소수 극렬 비정상 집단에 포로가 되어 극단적 증오와 망상에 빠짐으로써 보통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아싸(outsider) 정당'
- 주변정당은 오직 반사이익에 골몰, 대한민국의 불행이나 집권여당의 실수만을 바라면서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외면하는 '생활불감 정치'와 시끄러운 소수에 영합하여 민심과 당심이 끊임없이 괴리되는 '민심불감 정치', '존재감의 정치' 강행
- 주변정당은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서는 비정상 정치, 정쟁을 하고 있는 정당으로 낙인. 그래서 이념이나 진영의 지지자까지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영원한 야당

-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기대하는, 그래서 정치를 정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비정상적 노이즈 마케팅으로 일관하는 ‘망언의 정치’
- 자유한국당이 본질적으로 극소수 ‘태극기 부대’에 포로로 잡힌 ‘20% 정당’
-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20%, 한반도평화에 반대하는 20%의 지지에 매몰된 ‘20% 정당’으로 탄핵반대의 정당이자 냉전회귀의 정당
- 20% 정당은 보수진영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고 사실상 당원수 2%에 불과한 극단적 태극기 부대의 포로가 되어, 그 한계가 명확한 주변정당

○ 자유한국당 지지도 30% vs 20%

-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의 성공적인 타결을 기대했던 민심의 실망과 ‘진박의 재림’, 황교안 대표의 등장은 태극기 부동층을 결집,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30%가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지만 그 한계는 분명
-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30%와 2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20% 초반
- 리얼미터 조사는 응답률이 낮은 자동응답(ARS)방식 위주이기 때문에 정치고관여층, 열성 지지층이 과잉대표될 가능성
- 한국갤럽 조사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전화면접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유권자의 의사도 반영
- 따라서 한국갤럽의 20% 초반이 현재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대체로 반영
- 박근혜와 결별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한계는 25%로 추정. 박근혜 사면에 찬성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25%
 - ※ 2017년 4월 8~9일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응답률 15.3%의 한국갤럽과 유사한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5.1% 였음
- 물론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으로 인해 보수진영 고정지지층 30%가 결집하거나 정권심판론 동조층이 결집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
-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적중도가 높고, 투표율이 낮으면 정치 적극 관심층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리얼미터의 적중도가 높음

-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리얼미터 조사가 맞을 가능성이 높고, 투표율이 높은 대선에서는 한국갤럽의 조사가 맞을 가능성 높음. 투표율이 그 중간인 총선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을 균형 있게 볼 필요
- 가령, 3월 14일 리얼미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32.3%, 12~14일 조사했던 한국갤럽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22%였음
- 한국갤럽은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전화면접방식이고, 리얼미터는 90% 자동응답 방식에다 전화면접을 10% 보충. 응답률도 한국갤럽이 15%, 리얼미터가 8.1%로 거의 2배가 차이 남

-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부동층에 영합하여 진보 대 보수의 진영대결 구도보다 더욱 속 좁은 좌파 대 우파의 이념대결 구도로 회귀하여 문재인 정부를 터무니없이 ‘좌파독재’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비난하면서 야당으로서 생존을 도모하고 정권심판의 반사이익이 부활하기만을 바라는 주변정당
- 주변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극소수 ‘태극기 부대의 정당’에서 25%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박근혜 사면의 정당’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강도만 다를 뿐인 ‘태극기 부동층의 정당’
- 태극기 부동층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다고 느끼는, 아니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확신하는,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비정상 집단, 태극기 부대를 핵심으로 함
- 태극기 부동층은 극렬 태극기 부대를 선두로 후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탄핵까지는 너무했다고 느끼거나 탄핵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구속까지는 너무했다고 느끼거나 형량이 너무 했다고 느끼는 태극기 부동층에서 최대 25% 정도의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태극기 부동층으로 구성
- 태극기 부대를 극우라는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함. 국민의 상식을 정면 위반하는 몰상식한 자유한국당을 극우정당으로 칭하는 것 역시 국민의 상식에 반함. 극우를 넘어서는 몰상식한 비정상 집단
-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태극기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주류의 의미 변화, 주류교체에 직면한 좌절감과 공포의 표현일 수 있음. 이는 물론 ‘6.25 세대’가 겪은 끔찍한 경험을 이해해야

- 국민의 피와 땀으로 결실을 맺은 호국과 산업화를 미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만 착각하는 태극기 부대의 시대착오성은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괴랄함에서 잘 나타남
- 태극기 부대는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를 보수의 기준으로 규정, 탄핵에 찬성하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도 '위장보수'로 규탄. 자신들을 '대한민국에 하나 남은 정통 보수우파'로 자위
- 태극기 부대의 마인드는 음모론에 기초한 극단적 네거티브. '김정은의 임박한 남침설'을 공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됐고,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꼭두각시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형법93조-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고발까지 함
- 태극기 부대의 가장 중요한 대의는 '반(反)김정은, 반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우익의 정체성이 확실한 정통 보수우파가 당권을 잡아 자유한국당을 태극기 부대의 정당으로 만들고 태극기 부대 중심으로 보수대통합. 이를 위해 조직적인 당원가입운동 전개
- 황교안 대표는 김진태 의원과 함께 태극기 부대의 당대표 후보로 공인되었고, 결국 당대표에 당선. 자유한국당의 일련의 망언은 결국 태극기 부대의 망언과 궤를 같이 하는 태극기 부대의 정당임을 증명
- 황교안 대표가 민심의 낮은 지지와 대비된 당심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 자유한국당 당원만이 태극기 부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 등은 자유한국당 자체가 비정상 정치를 하는 구제불능의 주변정당이 되었다는 혼한 증거

○ 태극기 부대 마인드

- 태극기 부대의 부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결기 운동본부(탄기국)'. 탄기국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로 변모
- 태극기 부대는 '자유대한'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태극기 부대는 '19대 대선은 사기,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라고 강변하며 사기대선진상 규명본부를 만들었음. 이들은 전자개표기로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음

- 태극기 부대는 자유한국당에 조직적 입당, 우익의 정체성이 확실한 주자를 내세워 당권 쟁취 목표. 여기에 김진태는 물론 황교안도 포함. 결국 황교안 대표의 당선은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부대 정당화
-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전에 자유한국당 당권부터 되찾자. 모든 우익 세력 등이 반드시 (2018년) 9월 전에 떼거리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으로 입당해서 우익의 정체성이 확실한 당대표를 뽑자. 당권만 되찾으면 굳이 신당 만들 필요 없이 원내외 우익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우익정당으로서 우익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구심체가 될 것이다.”(태극기 부대의 자유한국당 당원가입 태극기집회 단체SNS 호소문)
- “현재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위장 보수’가 당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없다.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정통 보수우파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 “정통 보수우파는 친박이고, 친박 중에서도 핵심은 태극기 세력이다. 친박이 당연히 당권을 잡을 것으로 본다. 또한 친박보다 더 중요한 대의는 ‘반(反)김정은, 반문재인’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의 꼭두각시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했다. 태극기 세력은 북한에 반대하고 북한의 꼭두각시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배척하는 어떤 세력과도 함께 할 것이다.”
-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018년) 11월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북한은 미군부대가 있는 평택까지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남침을 강행할 것이다”(민중총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은 정통 보수우파가 아니다. 그들이 몸은 보수우파에 남아 있을지언정, 영혼은 좌파와 다를 바 없다. 태극기 세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결집됐다. 태극기 세력만이 대한민국에 하나 남은 정통 보수우파라고 할 수 있다.”
-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대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오히려 우리 태극기 세력이 자유한국당을 보수대통합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논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현 정치권에서 보수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가짜 보수에 지나지 않는다.”(김영택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시사저널. 보수대통합론, 2018.10.29)

○ 자유한국당의 민심불감증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합산 득표율 50.1%로 압승. 당심의 척도인 선거인단에서 55.3%로 압도적 다수를 얻었지만 민심의 척도인 국민여론조사에서는 37.7%에 불과. 반면, 오세훈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22.9% 밖에 얻지 못했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50.2%를 차지

- 결국 민심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후보가 지고 당심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후보가 이기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 더욱이 5.18 망언의 주인공중 하나인 김순례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망언의 정당임을 자인
- 이는 민심과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당심이 태극기 부대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에서 거듭 입증
- 태극기 부대에 취해야 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심, 즉 일반 국민 중 과반은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와 단절하라고 요구. '단절해야 한다'는 응답은 57.9%, '포용해야 한다'는 26.1%, 모름·무응답은 16.0%였음
-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정반대로 과반수가 훨씬 높게 태극기 부대를 포용할 것을 요구. '단절해야 한다'는 13.5%에 불과하고 64.8%가 포용해야 한다고 응답.(TBS, 리얼미터. 2019.2.21)

○ 혁신적 포용노선

- 대한민국 중심정당, 더불어 민주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은 시대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주류교체의 동학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
- 중심정당은 한 걸음 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정치를 정상화하는 생활체감과 국민공감을 통해 진영정당체제를 중심정당체제로 전환하는 수평적 주류교체, 즉 정당 재편성과 함께
- 시끄러운 소수, 정치계급의 특권구조를 타파하고 조용한 다수, 국민이 정치의 주류가 되는 수직적 주류교체, 즉 시대교체를 주도함으로써 주류교체 실현
- 건국 100년을 넘어 광복 100년, 2045년까지 사람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대한민국 건국세대의 꿈, '새 100년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민주당은 혁신적 포용정당으로 인정받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확립
- 온 국민이 승리하는 원칙 있는 협력의 국민주권민주주의 시대, 대한민국의 성취를 국민의 삶으로 완성하는 창의적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실현하는 광복세대의 꿈, '진정한 광복'을 달성함으로써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주도하는 신주류의 정당으로 확립
- 민주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은 혁신과 포용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융합을 지향, 혁신은 포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동반 전진'. 포용은 혁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 개선하는 '전반적 상향이동'
-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는 혁신 없는 포용은 공허하고, 위로, 함께 잘 사는 포용 없는 혁신은 맹목, 긴 안목을 가진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과 연속집권 없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위태

○ 혁신적 포용 프레임

- 촛불혁명이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과 버금가는 30년 주기, 시대교체의 출발점임을 자각하고 주류교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여(與)의 '자연스런 여당'. 정부와 더불어라는 의미의 여당, 진보진영과 더불어 라는 의미의 여당을 넘어 민심과 더불어 라는 의미의 온 국민이 인정하는 자연스런 여당

- 자연스런 여당은 고정된 진영이 아니라 혁신적 포용의 오아시스에 촛불혁명과 한반도평화를 지지하는 온 국민의 안식처를 만드는 ‘빅 텐트’. 민주당의 정치적 정주민, 원민주당 지지층과 함께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치적 유목민, 신민주당 지지층, ‘더불어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빅 텐트가 되어야
- 자연스런 여당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은 ‘혁신적 포용정당’. 더불어 정신을 구현한 포용정당이자 새로운 시대의 민주당은 혁신정당
-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은 민주당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길. 민주당은 보수진영을 반대하는 진보정당을 넘어서 민심을 직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정상화 정치를 실천하는 ‘혁신적 포용정당’
- 반독재민주화 시대이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민주개혁’으로 불리어짐.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평화민주’ 자임
- 이후 진보정당과의 후보단일화 또는 연대를 목적으로 ‘민주진보’ 또는 ‘진보개혁’을 자임. 최근에는 그냥 ‘진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짐
- 그러나 민주당이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론에 갇힌 진보라는 이름은 부적절. 더욱이 민주화이후 최근까지 진보성향 유권자가 유의미하게 늘었다는 증거조차 거의 없음
- 민주당은 온 국민의 꿈, 온 민족의 꿈,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혁신적 포용의 길을 가는 대한민국 중심정당임을 자부하면서 ‘혁신적 포용’ 또는 ‘혁신포용’, 약칭 ‘포용’을 자임해야

[표 I-3] 혁신적 포용 프레임

	포용	배제
혁신	중심정당	보수정당
정체	진보정당	주변정당

- 유권자의 시각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진영정당 또는 이념정당.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진보정당은 전체의 혁신보다 약자

- 의 포용을 중시하는 ‘정체적 포용정당’, 보수정당은 약자의 포용보다 전체의 혁신을 우선하는 ‘혁신적 배제정당’
- 진보정당은 약자를 다수, 강자를 소수로 등치하며 약자를 위하는 것이 선이고 강자를 위하는 것은 악이라는 ‘착한 정당 콤플렉스’
 - 착한 정당 콤플렉스는 독선에 빠져 ‘선’을 ‘진’으로 치환, 약자를 위하는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언더도그마(underdogma)’를 신봉할 가능성
 - 언더도그마는 역설적으로 행위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문제는 오직 구조에만 있다는 구조맹신 심리로 전도
 - 구조맹신 심리는 행위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권리만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짐.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강조. 진보정당에게 문제는 냉혹한 시장이고 해법은 따뜻한 정부. 따뜻하고 큰 정부는 진보정당의 이상
 - 따라서 진보정당은 따뜻하지만 무능한 엄마의 이미지. 진보정당은 성장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에 맞서 누가 경제를 잘 성장시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분배와 평화로 이슈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 성장과 안보라는 아버지의 이슈와 분배와 평화의 엄마 이슈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문제로 착각
 - 보수정당은 전체의 문제를 우선시하여 전체를 위하는 것이 결국 소수를 위해서도 좋다는 ‘옳은 정당 콤플렉스’, 편협해지면 옳은 것이 오른쪽에만 있다는 ‘오른 정당 콤플렉스’
 - 옳은 정당 콤플렉스는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구성원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따라서 전체 집단을 참칭하여 강자만을 편드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전체주의, ‘오버도그마(overdogma)’를 신봉할 가능성
 - 전체주의는 구조는 문제가 없고 다수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탈 행위자의 책임만 묻는 ‘희생양 만들기’ 심리로 전도
 - 희생양 만들기 심리는 사회 부조리를 행위자의 행태, 도덕성 문제로 치환. 그래서 행위자의 책임만 묻는 단기적 해법에 치중. 보수정당에게 문제는 유약한 정부이고 해법은 책임감을 키우는 시장. 작고 강한 정부는 보수정당

의 이상

- 따라서 보수정당은 엄격하지만 유능한 아버지의 이미지. 분배와 평화에 대해 침묵하면서 오직 성장, 오직 안보의 외골수 기질. 성장과 분배,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적 사고 결여
- 열성 지지자, 시끄러운 소수를 제외한 평범한 유권자, 조용한 다수의 시각에서 혁신과 포용의 한편만 강조하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장단점과 강약점이 선명한 반편의 정당으로 인식. 전통적으로 진보를 좌파, 보수를 우파로 지칭한 배경
- 따라서 상호간 반사이익이 가능하고, 악화되면 적대적 공생으로 퇴행. 양대 진영의 경쟁은 결국 상시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여야 양당체제로 귀착
- 혁신과 포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정당’은 정상화 정치를 하는 중심정당으로 유권자의 다수의 호감을 받고, 혁신과 포용을 모두 반대하는 ‘배제적 정태정당’, 나아가 ‘배제적 퇴행정당’은 비정상 정치를 강행하는 주변정당으로 비호감의 대상
- 따라서 선거는 비정상 정치를 구태로 심판하고, 비호감을 확인. 정상화와 비정상의 호불호 정당체제에서 진영대결은 구태. 이를 철지난 이념대결로 극단화하는 주변정당은 더욱 더 구태
-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은 정권교체의 정치동학에서 비롯된 진보와 보수의 낡은 프레임을 청산하고 주류교체의 정치동학을 현실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 프레임을 재설정
- 첫째, 진영대결 또는 이념대결을 지양하는 혁신적 포용노선은 ‘수준 높은’ 중심정당의 길. ‘중심’은 좌우 일직선상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양극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구도에서 꼭짓점 위치. 따라서 중심정당은 국민의 관점에서 좌우와 ‘다르고’ 좌우의 정치보다 ‘더 수준 높은’ 정상화 정치로 인식
- 좌우의 양끝에서 싸우는 평면(2D) 정치, 적대적 공생을 넘어 앞으로, 위로 혁신하고 포용하는 혁신적 포용정당과 뒤로, 밑으로 퇴행하고 배제하는 퇴행적 배제정당이 공존하는 입체(3D) 정치,
- 상생의 중심정당과 기생의 주변정당의 기묘한 공존은 정상화 정치가 어려울

- 뿐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3D 진보'로서 혁신적 포용이 더욱 필요함을 증명

 - 둘째, 혁신적 포용노선은 '함께하는' 중심정당의 길. 보통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잘 살고자하는 '희망'을 '욕망'으로 경멸하는 관념적 진보노선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꿈'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희망하는 서민의 '공동희망의 정치'를 실천
 - 서로를 무임승차의 '루저'와 승자독식의 '탐욕'으로 비방하는 제로섬의 정치를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생활체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동반 전진을 추구하는 혁신, 약자를 보호하면서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계층상승하는 전반적 상향이동을 추구하는 포용을 더불어 실현하는 희망의 정당
 - 셋째, 혁신적 포용노선은 '똑똑한' 중심정당의 길. 자기 진영의 고정지지층 동원력을 최대화하여 반사이익의 하드볼 게임, 하드파워(hard power) 정치에만 주력하는 주변정당이 아니라
 - 부동산과 교감하는 확장력을 최대화하여 이질성을 포용하는 테트리스 게임, 소프트파워(soft power) 정치를 하드파워 정치와 융합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 정치는 중심정당의 자연스런 면모
 - 좌우의 이분법적 기성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치적 스마트폰 앱을 능동적으로 조합하는 스마트 유권자에 적중하는 맞춤형 어젠다를 기안
 - 혁신적 포용노선은 양자택일의 정치를 거부, 보수와 진보의 고정관념을 넘어 민생제일, 국익우선의 민심중심, 2030과 5060의 세대대결 노선을 넘어 노장청 화합과 세대상생,
 - 안보와 평화를 정쟁화 하지 않고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하는 신한반도체제와 한반도 대정치, 정부와 시장을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정부의 책임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자 정부·시민사회·시장의 균형잡힌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중심정당의 길
 - 넷째, 혁신적 포용노선은 '강한' 중심정당의 길. 단순한 여당 역할을 넘어서 안정감 있는 여당과 존재감 있는 야당 역할을 동시에 수행, 확장적 대세를 형성함으로써 이겨놓고 싸우는 강한 정당

- 야당이 주변정당화, 극단적 항의정당으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의 야당 습성에서 벗어나 건설적 야당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의 당연한 여당,
- 내실 있는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공고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중심정당
- 다섯째, 혁신적 포용노선은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중심정당의 길. 유능한 아버지와 따뜻한 엄마가 가정을 안정시키듯, 아니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 시대에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부모가 필요하듯 혁신과 포용을 융합하는 중심정당의 길
- 따뜻하면서 유능한 혁신적 포용노선은 구조적 원인을 탓하면서 근본적 문제 제기만 하는 서생적 좌파와 행위자의 책임만 물으면서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하는 상인적 우파를 넘어 구조적 기회와 행위자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감각을 겸비한 중심정당의 길
- 중심정당은 생활인의 절박한 삶의 문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상적 스몰딜을 통해 생활체감의 정치를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공감의 정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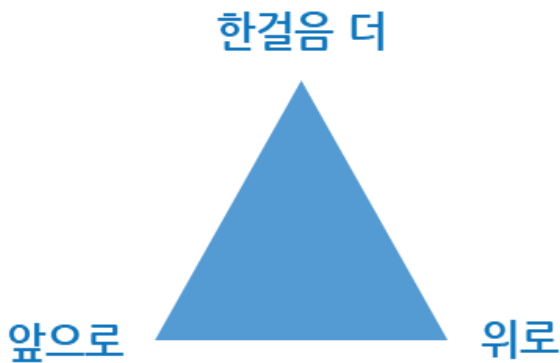
○ 한결을 더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은 내년 4.15 총선, 민주당이 진정한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험무대가 또한 4.15 총선
- 전국 선거 4연승은 없다는 ‘3연승의 저주’는 자유한국당의 저주일 뿐 아니라 민주화이후 정치양상, 정권교체의 동학
- 무엇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중심정당답게 내년 총선에 임해야. 과거 여당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신할 필요
- 대한민국 중심정당은 정권심판 부동층으로 변할 수 있는 촛불 부동층, 한반

- 도평화 부동층의 민심을 얻는 정당. 부동층이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재판관
- 특히 민주당에 정당일체감이 없는 신민주당 지지층, 더불어 지지층은 여전히 민주당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 부동층에게 과거와 함께 미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할 필요. 무엇보다 중간평가 선거임을 부정할 필요 없이 정상화와 비정상을 평가하는 선거임을 분명히 해야
 -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중간평가임을 분명히 해야. 민주당이 과반수에 훨씬 미달되는 128석,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비토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정상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선거여야
 - 내년 4.15 총선은 정권심판의 선거가 아니라 정상화와 비정상을 선택하는 ‘선택의 선거’. 굳이 심판을 말해야 한다면 비정상 정치를 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임을 분명히 해야
 - 그래서 내 삶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한반도를 정상화하는 선거, 이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선거
 - 둘째, 중심정당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2자 진영대결의 이전 투구가 아니라 민심이 대법관인 3자 재판정, 정상화 정당이 원고, 비정상 정당이 피고인 재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심의 공명정대를 호소해야
 - 정상화 정당과 비정상 정당을 분별, 판결하는 결정적 증거는 싸움. 국민은 싸움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싸움, 여의도 정치권만의 싸움을 혐오
 - 비정상 정치, 정쟁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을 믿고, 국민이 원하는 정상화 정치의 싸움, 정치 정상화의 싸움을 해야
 - 자유한국당이 예상하는 정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정치로 싸워야.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이슈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때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이슈를 갖고 국민이 원하는 때에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워야
 - 셋째, 환상 없는 승리를 추구해야. 환상은 환멸만을 가져올 뿐. 국민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중심정당답지 않은 행태

-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를 혐오하는 보통사람, 조용한 다수는 선심성 공약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모든 것을 단기간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도 않음
- 국민은 해법 이전에 경청을 원함.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직하게 소통하는 용기를 원함.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는 협치를 원함. 가시적 성과를 넘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 원함. 우리가 함께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원함
- 그래서 그들 중 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원함.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승리는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승리여야

[그림 1-2] 메시지 구도



- 내년 총선은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이 함께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개선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선거
- 혁신적 포용의 관점에서 앞으로, 위로 한걸음 더 가는 정상화 정치냐, 뒤로 퇴행하고, 밑으로 추락하는 비정상 정치, 정쟁이냐를 선택하는 선거
- 태극기 부대에 포로로 잡혀 '좌파독재' 운운하며 철지난 이념갈등을 부활시켜 국민을 분열시키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비정상 정치를 심판하

- 는 선거
- 혁신은 포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동반 전진’. 포용은 혁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 개선하는 ‘전반적 상향이동’
 - 혁신적 포용은 보통사람의 생활정서와 공명. ‘앞으로’, ‘위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진 미래지향적 희망과 맞닿아 있음. ‘함께’, ‘한걸음 더’는 전체사회에 대한 회의적 전망과 맞닿아 있음
 -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의 계층상승과 경제생활, 우리나라의 과거에 일정정도 절망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음. 개인의 계층상승과 경제생활에 대해 과거회고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미래전망에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적 전망과 전체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차이를 보임. 본인이나 자기 가족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국사회 전체, 특히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전망을 하고 있지 않음
 - 우리 민족이 ‘흥’과 ‘한’의 민족이라 할 때, 미래지향적 흥을 갖고 있는 반면, 과거회고적 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민족. 또한 개인적 흥을 갖고 있는 반면, 전체사회에 대해서는 한을 갖고 있는 민족
 - 함께 앞으로, 함께 위로, 한걸음 더 가는 혁신적 포용노선은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민족 특유의 잠재력 발양

[그림 I-3] 어젠다 구도



- 정부와 민주당의 공과를 정직하게 소통할 필요, 소통은 경청.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와 함께 과를 과감하게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공칠과삼(功七過三)의 자세는 중심정당의 기본덕목
- 동시에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꾼 성과, 온갖 악조건 속에서 경제활성화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병행하려는 노력 등, 누가 국민의 어려움,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분명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 내년 총선은 생활체감이나 민심불감이나, 국민공감이나 존재감이나를 선택하는 선거.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선거,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거
- 생활인의 간절한 문제, 민생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생활체감 정책의 생사가 결정되는 선거
-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 한반도평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존폐가 걸려있는 선거
- 그래서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닌 온 국민의 소원, 민족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대도약이 실현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선거
- 민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막무가내 정치’, ‘노답 정치’를 심판하고 국민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활체감 정치’, 국민공감 정치’를 선택하는 선거
- 한반도평화와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을지라도’, 아니 그 ‘때문에’ 전환의 계곡에 주저앉아 추태를 보이며 앞을 가로막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일사천리는 없다는 상식에 근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두벽 두벽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정상화 정치를 선택하는 선거

○ 시대교체

- 대한민국 중심정당, 민주당의 혁신적 포용노선은 시대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주류교체의 동학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시대교체를 주도하는 신주류(new mainstream)를 목표

-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대한민국 주류교체.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 주류교체를 정치 목표로 선언. 국민이 주류인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 천명
- 좌우를 나누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을 청산하고,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할 것을 주창.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도 없고,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도 없음
- 국민의 요구는 간명.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 따라서 5.9 대선을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정의냐 불의냐의 선택, 상식이나 몰상식이나의 선택, 공정이나 불공정이나의 선택으로 규정

○ 주류교체

-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이념은 없습니다. 국민보다 중요한 이념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머리에 남은 대립과 갈등, 분열의 찌꺼기까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 “저는 오늘,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승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촛불을 밝혔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주권시대를 요구하는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 “이번 대선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정의냐 불의냐의 선택입니다. 상식이나 몰상식이나의 선택입니다. 공정이나 불공정이나 선택입니다.** 과거 적폐세력이나 미래 개혁세력이나 선택입니다. 적폐연대의 정권연장을 막고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가야합니다.”
- “제가 정치를 결심한,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류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치의 주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주류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 “연대와 협력으로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국민은 상식과 정의로 통합되길 갈망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마음이 모아지길 희망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모두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 이런 국민들이 주역이고 주류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 2017.4.3)

- 중심정당은 한 걸음 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정치를 정상화하는 생활체감과 국민공감을 통해 진영정당체제를 중심정당체제로 전환하는 수평적 주류교체, 즉 정당 재편성과 함께
- 시끄러운 소수, 정치계급의 특권구조를 타파하고 조용한 다수, 국민이 정치의 주류가 되는 수직적 주류교체, 즉 시대교체를 주도. 중심정당의 신뢰기반을 공고화하고 주류교체를 실현
- 대한민국 중심정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시대교체는 이중적 과제. 첫 번째 시대교체의 과제는 건국 100년을 넘어 광복 100년까지 사람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대한민국 건국세대의 꿈, '새 100년의 꿈'을 실현하는 100년의 시대교체
- 새 100년의 꿈,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은 100년의 시대교체를 주도하는 민주당이 혁신적 포용정당으로 정립, 명실상부 대한민국 중심정당으로 확립되는 과정
- 두 번째 시대교체의 과제는 민주당이 민주화, 산업화, 한반도평화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주도함으로써 국민주권민주주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실현하는 광복세대의 꿈, '진정한 광복'을 달성하는 30년 주기의 시대교체
- 진정한 광복을 향한 시대교체가 실현되는 과정은 민주당이 민주화의 정당을 넘어 원칙 있는 협력의 국민주권을 지향하는 정당, 햇볕'정책'의 정당을 넘어 지속가능한 신한반도'체제'를 지향하는 정당,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구축한 정보화의 정당을 넘어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정당임을 인정 받는 과정

[표 I-4] 시대교체 I : 건국 100년, 광복 100년

건국 100년(2019년)			광복 100년(2045년)
발전(1단계 압축 발전)			성숙(2단계 융합 발전)
함께 만든 나라(미생의 시기)	함께 이뤄낸 나라 (완생의 시기)		함께 잘 사는 나라(상생의 시기)
건국과 호국	산업화	민주화	포용
건국 1세대	건국 2세대	건국 3세대	건국 4세대

- 첫 번째 시대교체, 새 100년의 꿈은 사람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100년, 광복 100년, 2045년까지 완성함으로써 건국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혁신적 포용
- 대한민국 건국 10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919년에서 올해 2019년까지 지나온 100년, 대한민국의 과거는 모든 세대가 온갖 시련을 함께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
- 대한민국의 역사는 냉소와 한을 넘어 열정과 흥으로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이룬 기적의 역사, 치욕적인 식민지에서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 모든 고난을 기어이 이겨내서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위대한 국민의 역사
- 대한민국 건국 100년은 발전의 역사.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선도하고 온 국민이 노력한 1단계 압축 발전
- 미생의 시기에 ‘함께 만든 나라’. 완생의 시기에 ‘함께 이뤄낸 나라’
- 건국 1세대의 시대적 과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워 광복을 쟁취하고, 절체 절명의 전쟁을 맞아 나라를 지켜낸, 건국과 호국을 완수한 ‘함께 만든 나라’
- 건국 2세대는 가난에 맞서 산업화의 시대적 과제에 성공하고, 건국 3세대는 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시대적 과제를 실현한, ‘함께 이뤄낸 나라’
-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 일곱 나라 중 유일하게 식민지 없이 자수성가한 나라,
-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한류로 전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건국 100년의 역사
- 올해 2019년은 새로운 100년의 시작, 새 100년의 첫 정부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새 100년의 꿈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구축
- 새 100년의 꿈, 건국 4세대, 더불어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는 ‘함께 잘 사는 나라’, 광복 100년, 2045년까지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 상생의 시기, 대한민국의 도전은 ‘성숙’.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사람중심의 혁신적 포용을 지향하는 2단계 융합 발전
-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민이 주류이고, 주역이 되는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
-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
-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 혁신이 없으면 포용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도 불가능
- 앞으로, 미래로 함께 전진하는 혁신 없는 포용은 공허하고, 위로, 함께 잘 사는 포용 없는 혁신은 맹목, 긴 안목을 가진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과 연속 집권 없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위태

○ 혁신적 포용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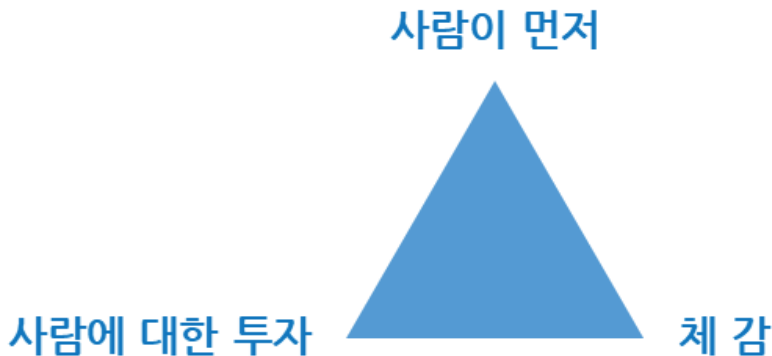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습니다.”
-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동력입니다.”
-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 “**포용국가는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9.2.19)

-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중심 국정철학에 입각. 사람중심은 혁신적 포용노선의 철학이자 ‘사람이 먼저’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의 공급측면 국정방향과 ‘체감’의 수요측면 국정방향으로 구성

[그림 I-4] 사람중심 국정철학



- ‘사람이 먼저’는 사람중심 국정철학의 가치. 좌우, 진보와 보수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넘어 사람이 먼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동시 존중, 혁신하려면 사람이 먼저이고, 포용하려면 사람이 먼저라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혁신적 포용노선의 가치
- ‘사람에 대한 투자’는 국민공감의 공급측면 국정방향.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혁신과 포용의 생태계를 조성, 강화하고, 보수의 토목에 대한 투자와 진보의 단순한 소득재분배를 넘어 사람의 역량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 ‘체감’은 생활체감의 수요측면 국정방향.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내 삶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함과 동시에

삶의 예측가능성이 파괴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 사람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과정은 분단의 광복을 넘어 진정한 광복이 실현되는 과정. 촛불혁명의 뜻, 4차 산업혁명의 동력, 한반도 평화변영의 기회가 실현되고 융합 발전하는 과정
- 진정한 광복은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라 온 국민이 승리하는 원칙 있는 협력의 국민주권민주주의 시대, 대한민국의 성취를 국민의 삶으로 완성하는 창의적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실현하는 시대교체

[표 I -5] 시대교체Ⅱ : 분단의 광복, 진정한 광복

분단의 광복		진정한 광복
1단계 민주화	2단계 민주화	3단계 민주화(국민주권민주주의 시대)
1단계 추격	2단계 추격	3단계 추격(4차 산업혁명 시대)
1단계 한반도	2단계 한반도	3단계 한반도(새로운 한반도 시대)
광복 1세대	광복 2세대	광복 3세대

- 두 번째 시대교체, 진정한 광복의 꿈은 광복 100년, 2045년까지 분단의 광복을 극복하는 국민주권민주주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실현함으로써 광복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혁신적 포용
- ‘분단의 광복’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산업화, 한반도평화를 분단시켜 단계적 실현. 민주화와 산업화를 정치진영으로 분단 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햇볕과 강풍의 진영으로 분단. 압축 발전의 빛나는 대한민국 역사에 짙은 그림자를 남김
- 진정한 광복은 혁신적 포용을 지향. 민주화와 산업화와 한반도평화의 선순환을 통한 융합 발전과 새로운 시대적 과제, 원칙 있는 협력, 창의적 융합, 평화와 번영을 실현함으로써 분단의 광복을 극복,
- 연속 민주화와 연속 산업화와 동시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한반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나라 실현

- 민주화는 국민주권의 상식을 실현, 정치를 정상화하는 진정한 광복을 향한 일련의 단계적 과정
- 광복 1세대의 민주화는 군정종식을 목표. 이를 제도화한 것이 87년 체제. 1단계 민주화의 선도는 민주화운동. 70년대 재야의 지사적 투쟁, 80년대 운동권의 반독재 투쟁
- 광복 2세대의 민주화는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의 기초조 건 확보, 2단계 민주화의 선도는 선명 민주정당.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90년 3당 합당의 보수패권체제에 맞서 ‘야당다운 야당’
- 정권교체 이후에도 진영대결에 기초한 민주화의 이념화, 민주주의의 선명성 관성으로 인해 민주정치의 기본인 ‘타협’이 ‘변절’이나 ‘배신’으로 낙인찍혀 문제해결의 정치가 봉쇄, 결국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비토크라시(vetocracy)로 퇴행
- 오늘날 광복 3세대의 민주화 과제는 ‘정치다운 정치’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으로써 민주정치의 상식을 공고화하고 정통성의 원천인 국민의 문제를 해결, 통치능력을 증명하는 ‘민주정(democracy)’. 3단계 민주화의 선도는 대한민국 중심정당

○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정

- 민주주의는 democracy의 잘못된 번역으로 특정 유형의 통치체제를 가리키는 개념. **민주주의란 democratism으로 표기될 수 있는 이념이라기보다는 democracy, 즉 ‘민주정’**이라는 사실. 귀족정(aristocracy), 과두정(oligarchy), 왕정(monarchy)처럼 democracy는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체제로서 ‘민주정’.
- “고대 그리스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데모(스)’와 ‘크라토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민중 스스로의 통치(체제) 또는 민중 스스로의 정부를 뜻한다. 서양에서 데모크라시는 그것의 현대어이다. 그런데 동양에서 이 용어를 수입하면서 ‘민주주의’라고 번역했다. 말 그대로 자유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식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형태로 번역한 것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democracy)를 이해하는데 많은 오해가 생겼다고 본다.”
- “운동으로서의 민주화를 말할 때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만, 민주화를 추진했던 세력이 집권을 다투게 되었을 때는 민주정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했다.”
- “대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차원은 ‘선거와 선거 사이’라는 두 단계 내지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인 선거의 시기는 정당 간 경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두 번째 단계는 선거 경쟁의 승자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단계이다. 그것은 곧 거대한 행정 관료 체계를 운영하고 관리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자신들의 비전과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최장집 등,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7)

- democracy가 민주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잘못 통용된 배경은 대한민국 건국과 호국 시기에 일제의 탄압에 맞선, 또는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항한 이념정립 차원, 산업화 시기의 엄혹한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의 신념표현의 차원일 수 있음

- 대한민국의 민주정은 정치를 정쟁화함으로써 정치불신을 가속화, 정치실패를 야기한 민주주의의 이념정치를 청산하고, 위로는 일상적 협치, 밑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치적 신뢰기반을 확대, 국민이 정치의 주류인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인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척하는 한반도 대정치를 주도함으로써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마인드를 아우르는 포용 민주주의를 구현, 진정한 광복의 정치적 과제를 완수하는 중심정당 체제
- 산업화는 국민의 역량축적을 통해 대한민국이 혁신, 선발국을 추격하는 진정한 광복을 향한 단계적 과정
- 통상적으로 회자되는 산업화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광복 1세대의 1단계 산업화. 풍부한 노동력에 기초한 요소 집약적 산업 육성, 저임금과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을 통한 1단계 추격
- 1980년대 중반 민주화 개시와 함께 시작된 광복 2세대의 산업화는 실행역량을 축적하면서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의 파도를 타고 상위 중진국 또는 초기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정보화의 2단계 추격
- 오늘날 광복 3세대의 산업화, 3단계 추격의 과제는 혁신역량과 포용역량을 융합한 개념설계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상위 중진국함정, 더 정확하게는 초기 선진국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안착, 더 이상 추격이 필요 없는 탈추격, 성숙 단계의 혁신적 포용국가
- 3단계 추격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3차 산업혁명의 단순 정보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화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성장모델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부와 민간 등이 함께 동반 추격하는 포용성장을 일관되게 추진, 국민이 국가의 발전을 생활에서 체감하는 사람중심경제 실현

- 한반도 관계는 분단의 반쪽 광복을 지양하고 평화공존을 통해 통일의 진정한 광복을 지향하는 단계적 과정
- 광복 1세대의 한반도는 북한의 남침 전쟁이후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인한 ‘열전형 냉전체제’
- 북한의 대남무력통일 시도에 맞서 ‘싸우면서 일하는’ 1단계 한반도의 총력동원 남북대결은 불행하게도 남북한 독재를 상호 정당화하는 적대적 공생으로 전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독재정권의 안보로 역기능
- 광복 2세대의 한반도는 민주화가 제도화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과 함께 시작된 탈냉전과 냉전의 ‘주기적 급반전 체제’
- 2단계 한반도에서는 탈냉전의 기회를 잡아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햇볕진영’의 전진과 한반도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강풍진영’의 역진이 10년 정권교체 주기에 따라 급반전
- 광복 3세대의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신한반도체제’, 한반도 뉴노멀을 목표
- 3단계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급반전 한반도체제를 넘어 북핵위기와 전쟁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 한반도에서 적대적 공생의 역진을 막고 호혜적 상생으로 약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신한반도체제 구축

II

PART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 더불어 민주당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박 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목 차 |

요 약	52
1. 대전환의 시대	55
○ 민족사적 대전환	55
○ 세계사적 대전환	56
○ 문명사적 대전환	56
○ 대전환의 주도세력	57
2. 역량중심 프레임과 중심·주변정당 체제	59
○ 역량중심 프레임	59
○ 중심·주변정당체제	61
○ 주변정당화 사례 : 영국 자유당	62
3. 보수진영의 분화와 주변정당화	64
○ 90년 체제의 붕괴	64
○ 보수동맹의 해체	65
○ ‘박근혜정치’와 혁신역량의 한계	66
○ ‘수구반동화’와 포용역량의 한계	70
4. 민주당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77
○ 정당역량	77
○ 혁신의 3대 핵심역량	79
○ 혁신의 3대 실천태도	84
○ 포용의 3대 핵심역량	88
○ 포용의 3대 실천태도	93

요 약

대전환의 시대다. 분단 70년을 이어 온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는 민족사적 대전환의 신호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완전한 종식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질서의 대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이 엄청난 변화와 함께 우리는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전대미문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다.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우리가 맞고 있는 대전환기를 민족사적 도약, 세계평화, 문명사적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난 시대의 모든 것을 규정했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한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는 국가적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 역사적 소명의식과 정치적 책임감을 지닌 역량 있는 주도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역량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 분단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에서 비롯된 대립과 갈등을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이념중심 프레임을 역량중심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화와 번영, 위대한 국민시대로의 도약은 정치세력의 역량에 달려 있다. 정치세력 간 경쟁의 중심축을 '정당역량'으로 전환시켜 역량으로 상대와 차별화하고 역량으로 경쟁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 지식, 기능, 태도**' 등의 **정당역량**을 지닌 세력이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

정당역량의 차이가 **중심·주변정당체제**를 형성한다. 정치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혁신역량과 다양한 가치와 차이를 통합할 포용역량 등 국가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권역량을 축적한 정당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당연한 여당'으로 여겨진다. 그 길이 스웨덴 사민당이 걸어 온 중심정당의 길이다. 과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대와 불화하며 혁신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낡은 이념의 경계 속에서 갇혀 있는 정당은 주변정당으로 전락한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몰락해 간 영국의 자유당의 길이 바로 주변정당화의 불행한 길이다.

현재 **보수진영은 주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 90년 체제의 붕괴, 보수동맹의 해체는 분명한 현실이다. 촛불혁명은 그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은 이념중심 프레임에 갇혀 있다. 혁신과 포용의 역량경쟁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양극화정치로 몰락한 '박근혜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허물어져 가는 냉전체제를 연장하려는 수구반동화로 치닫고 있다. 당심과 민심의 심각한 괴리를 메우려고도 않는다. 그 길은 주변정당화의 길이다. 그 길 위에는 정체, 배제, 분열의 늪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중심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 시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혁신, 포용, 통합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대전환기의 한반도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엄중한 역사적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 이정표를 세워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과 포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화와 평화, 번영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 온 **혁신의 기본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 혁신정통성역량 위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할 수 있는 **비전설계역량**, 시대를 관찰하고 문제를 탐구하여 상황과 때에 적절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학습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약자를 대변하고,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해 온 **포용의 기본역량**을 지니고 있다. 사람중심의 포용정통성역량 위에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 포용민주주의, 포용사회, 포용성장으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밖으로는 국민이익 중심의 원칙 있는 협력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으로는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화이부동의 태도로 더 큰 당을 만들 수 있는 **패치워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개인 등을 연결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도 필요하다.

태도가 정치역량의 본질이다. 당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고 국민이 당의 역량을 **체감**할 수 있게 치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국민을 공경하는 **겸손함**, 국민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공감**, 국민을 두려워하는 **청렴**의 태도가 역량축적의 지름길이다.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

- 더불어 민주당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박 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대전환의 시대

○ 민족사적 대전환

- 한반도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격변기와 민족사적 도약의 결정적 국면에 진입
- 분단 70년 동안 강화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우리의 주도로 완전히 해체시키고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포용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전환점
- 식민지배, 분단, 전쟁 등으로 점철된 수난의 약소반도국에서 민족사적 도약과 번영은 물론 세계평화창조국가로서 인류공영에 크게 이바지할 반도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도래
- 남북이 평화롭게 상생, 공존하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이뤄 ‘민족의 진정한 광복’과 ‘한반도 선샤인 시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치 역량 절실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 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 (...)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수석보좌관회의, 2019.02.25.)
-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겨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수석보좌관회의, 2018.03.12.)

○ 이해찬 대표 발언

-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99주년,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현재, 한반도는 역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민주당은, 안으로는 지난 백년간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적대와 분단을 넘어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당대표 출마선언문, 2018.07.20.)

○ 세계사적 대전환

- 100년 전 3·1혁명이 피식민지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촉진했듯이 신한반도체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결정적 기여
- 신한반도체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평화를 위협해온 ‘냉전체제’를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대사건
- 동북아 평화공동체 등 새로운 세계질서를 빠른 속도로 형성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정치·경제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대담한 청사진과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하는 등 세계사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절실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입니다.”(수석보좌관회의, 2018.03.12.)

○ 문명사적 대전환

- 인간의 가치체계, 일상생활, 산업현장에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급진적 단절과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에 이어 광속으로 온 세계를 휘감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등 전대미문의 현상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뉴노멀로 등장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증폭

- 획일성, 성장중심의 가치 등이 퇴조하고 다양성, 생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들이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고 복합사회를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절실

○ 문재인 대통령 연설

-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인류가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동등한 출발점에 섰습니다.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흥내 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첨성대를 만들어 별을 관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고 한글을 만들었으며, 철갑선인 거북선을 600년 전에 만든 민족입니다. 상상력, 창의력, 손기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2019.01.24.)

○ 대전환의 주도세력

- 전환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지닌 그야말로 ‘위기(危機)’. 전환기에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은 그람시의 말처럼 ‘낡은 것은 죽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을 때’ 발생
-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거대한 역사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하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했던 세력이 역사를 주도하지 못한 채 낡은 시대의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주도함으로써 지속된 역사의 질곡과 갈등**
- 또 다시 맞은 새로운 100년의 대전환기에 민족사적 도약, 세계평화, 문명사적 진보의 방향으로 **시대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류, 새로운 주도세력 교체가 무엇보다 중요
- 시대교체를 이룰 주도세력은 역사적 소명의식과 정치적 책임감으로 낡은 이념대결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가치로 사회적 현실,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에 맞는 국가적 비전을 설계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역량과

- 정치, 사회,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해 ‘국민 모두를 풍요롭게’ 하려는 정책과 담론, 실천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행복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포용역량,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내세워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시대와 사회적 과업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로 국민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인적역량을 갖춘 세력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다. 낡은 체제에 대한 대청산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문재인, 대한민국이 묻는다)

○ 역량중심 프레임

- 대전환의 계곡을 넘어 평화와 번영, 위대한 나라로의 도약은 낡은 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주류세력의 등장에 달려 있으며 새로운 주류세력의 성패는 ‘역량’이 좌우
- 새로운 주류세력으로서 대한민국 중심정당은 ‘천하의 큰 책임을 나 말고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치적 소명의식으로 ‘정당역량’을 강화해야 함

○ 이해찬 대표 역량강조

- “10년 집권해봤자 무너뜨리는데 불과 3,4년밖에 안 간다. 금강산도 개성공단도 복지정책도 무너졌다.... 우리당이 아니고서는 집권해서 이 개혁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고 보고, 우리가 유일한 책임정당이다.**”(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 2018. 11.25)

- 진보·보수, 민주·독재, 좌·우 등 지금까지 이념중심 프레임은 분단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에서 축적된 대립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님
- 이념중심 프레임 아래서 정치세력들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혁신 경쟁을 벌이지 않았고
- 정치, 경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배제 사회를 누구도 뒤에 남겨 두지 않는 포용사회로 전환시키는 데 전력하지 않은 채 이념으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적대적 두 국민을 분열시켜 국민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함
- 이런 상황에서 상대와 똑 같이 대응하고 싸움으로써 광범위한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야기하고, 상대진영을 총결집시켜 진영정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놈들’이라는 비난 속에서 정당성마저 상실

- 역량중심 프레임은 분단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에 기인하는 경로의존적 이념 대립을 넘어 **여야간 정치경쟁의 중심축을 국민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 역량’으로 이동시켜** 역량으로 상대와 차별화하고 역량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
-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나 이념적 신념에 따른 정치세력 간 대결의 정치는 국민분열, 민생외면 등 국민손해로 귀결되는 반면, 국민행복, 민생실현을 위한 역량을 축적하고 발휘하는 역량경쟁의 정치는 그 경쟁의 이득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환원
- 역량중심 프레임에서 경쟁의 중심축은 **혁신 대 정제, 포용 대 배제, 통합 대 분열**로 재편성되고 누가 혁신, 포용,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정당인가로 경쟁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는 구도
- 정당역량이란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이 보유한 **‘가치, 지식, 기능, 태도’**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
- **가치**는 자신의 정통성, 시대적 상황과 공동체의 요구에 입각해 정당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 추구하려는 지향
- **지식**은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설계·기획 할 수 있는 능력
- **기능**은 비전과 정책을 전략화해 효과적이고 성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
- **태도**는 정당구성원들이 실행의 과정에서 일과 당, 국민을 대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총체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역량의 본질

○ 문재인 대통령, 태도의 중요성 강조

- “저는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나라 공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방법, 이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저는 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본질인가 하면 국민들을 모셔야 하고, 국민들을

모시는 그 존재가 정치인들이고 공직자라면 그런 모시는 어떤 본질이 태도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와 공직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눈높이하고는 가장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수석보좌관회의, 2018.06.18)

[그림 II-1] 정당역량의 요소



○ 중심·주변정당체제

- 역량중심 프레임은 정당체제를 중심·주변정당체제로 형성시킴
- 중심·주변정당체제는 기존의 사회균열체계에 따른 정당구분이 아니라 정당 역량, 즉 정당 특유의 가치, 지식, 기능, 태도의 차이와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차이에 따른 구분
- 정당의 중심화와 주변화는 구체적인 사회균열구조 속에서 분명한 지지기반을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역량축적과정과 국민의 신뢰축적을 통해 장기적인 추세로 진행되어 일정정도의 안정성을 지닌 중심·주변정당체제를 구축
- 중심정당은 당의 가치, 경험, 성과, 태도 등으로 축적된 기본역량, 즉 당의 **정통성역량**을 토대로 정치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혁신역량**과 다양한 가치와 차이를 통합할 **포용역량** 등 국가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당연한 여당’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당

- 중심정당은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롭고 담대한 국가비전을 설계해
- 새롭게 바뀔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그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재의 복잡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세력
- 중심정당은 단순히 거대정당이나 집권정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이고 질적으로 축적된 수권역량과 태도에서 나오는 품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 반면, 주변정당은 과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대와 불화하며 혁신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화해와 포용이라는 다양성 사회의 가치를 거부하고 낡은 이념의 경계로 나뉜 진영의 정치를 지속하는 정당
- 온 국민의 통합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대안 없는 항의정당, 여당실수의 반사이익에 기대는 천수답정당으로 국민에게 만년야당, 자연스런 야당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당
- 집권당의 실책에 의해 간헐적 약진은 있을 지언정 다수 국민의 포괄적 이익을 대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 속에서 만년야당으로 존재

○ 주변정당화 사례 : 영국 자유당

- 중심정당에서 주변정당으로 일순간에 몰락해 장기저락을 회복하지 못한 영국 자유당의 경우가 중심정당에서 주변정당으로 몰락한 극적인 사례
- 영국자유당은 휘그파의 오래 된 전통과 20세기에 들어 선 영국을 훌륭하게 건설하고 주도했지만 1920년 대 후반부터 몰락해 지금까지 주변정당으로 명맥만 유지
-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40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으로 집권, 보수당은 150석, 새로 결성된 노동당은 30석, 이후 10년 동안 지속집권

- 영국 최초의 총리로 불리는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 찰스 그레이(Charles Grey),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Gladstone), 허버트 헨리 애스퀴스(Herbert H. Asquith),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등 걸출한 지도자들을 배출해 영국 정치를 주도
- 선거권 확대, 아일랜드의 독립, 상원의 개혁 등 시대적 흐름을 바꾼 핵심 개혁 정책들을 도입해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924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겨우 40석, 보수당은 419석, 노동당은 151석으로 패배
- 그 이후 장기저락 지속해 한 번도 재집권하지 못한 채 사민당과 합당해 자유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 주변정당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 자유당이 주변정당으로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통치능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 자멸
- 그와 달리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변화된 시대에 당을 유연하게 맞춰 나가며 혁신과 포용을 극대화해 영국의 중심정당으로 자리매김
- 영국 자유당은 집권 기간 축적된 역량마저 내부의 분열과 파벌싸움으로 소진한 채 정치적으로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의 질문에 포용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 시대의 경제, 사회, 정치 문제들을 어떤 비전 아래 어떤 정책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혁신적 역량으로 대응하지 못함

3 보수진영의 분화와 주변정당화

○ 90년 체제의 붕괴

- 87년 분출한 민주화 열망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은 혁신이 아닌 기득권 유지로 방향을 잡고 90년 3당 합당을 통해 티케이(대구·경북), 피케이(부산·울산·경남), 충청(대전·충남북)의 ‘패권적 지역연합’ 구축
- 97년 DJP연합, 2002년 충청과 영남의 노무현 후보 지지로 약화된 지역연합은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다시 복원되는 듯 했으나 2012년 대선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패권적 지역연합의 90년 체제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해체

○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연합의 붕괴

- 17개 광역단체 중 14곳에서 더불어 민주당 단체장후보가 당선되어 단일정당으로 역대 최대 광역단체장 배출
- 특히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광역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영남 5개 시도(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중 부산, 울산, 경남 등 3곳에서 최초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당선
- 5개 시도의 구청장, 군수, 시장 선거에서도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됨
- 당선자가 없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대구의 선거결과도 좀 더 들여다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30-40%의 높은 득표율을 보임. 경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1곳이 박정희대통령의 고향이며 보수의 성지인 구미라는 점도 의미가 큼

[표 II-1] 역대 지방선거 5개 시도의 시도의회의원 당선자수

()는 전체의석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부산	0	0	0	0	0	0	38(42)
대구	0	0	0	0	0	0	4(27)
경북	1	0	0	0	0	0	7(54)
경남	0	0	0	0	2	0	31(52)
울산	0	0	0	0	0	0	15(19)

- 광역비례 정당득표율에서도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섬
- 기초비례의 경우도 부산과 울산 전 지역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앞서고 경남도 5곳에서 앞섬. 대구에서는 모두 한국당이 앞서지만 더불어 민주당도 지역평균 40%에 육박하는 정당지지율 획득

[표 II-2] 제7회 지방선거 5개 시도광역비례의원 당선자수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더불어민주당	3	1	2	3	2
자유한국당	2	2	3	2	1

[표 II-3] 제7회 지방선거 대구 기초의원비례대표 정당득표율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더불어민주당	36.88	38.41	41.22	38.19	46.35	37.74
자유한국당	44.33	61.58	58.77	45.93	51.50	44.81
바른미래당	16.73			10.42		10.46

○ 보수동맹의 해체

- 한국의 보수진영은 각각 반공과 안보를 중시하는 국가주의적 보수와 법질서를 존중하고 시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적 보수가 보수라는 지붕 아래 모여 있는 동거세력
- 서서히 균열을 보여 오던 보수의 동거는 국정농단과 탄핵의 과정, 한반도 냉전해체와 평화체제의 도래라는 상황변화 아래서 본격적인 붕괴
-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위기를 돌파하고 보수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시도했지만 자유주의보수세력의 이탈로 선거에서 패배
- 국정농단 등에서 발생한 법질서와 시장질서의 파괴는 자유주의적인 법질서파와 시장파가 기존의 보수동맹에서 이탈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수구냉전을 추구하는 반공안보세력이 보수진영을 주도(천관율, 시사인, 2017. 4.3)
- 보수동맹의 해체는 보수엘리트들의 분화를 넘어 보수대중들의 균열

○ 사이 보수는 부끄러운 보수

- 사이 보수는 여론 조사 등에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보수의 내성적 태도
- 현재의 사이 보수는 수줍어서 말하지 않는 보수가 아니라 보수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보수
- 박근혜 국정농단 앞에서 보수유권자들은 '이꼴 보려고 박근혜를 뽑아나!'라며 자책과 분노를 드러냈고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고 한탄
- 빅데이터 기법으로 네이버에 게재된 신문 정치 기사의 댓글 93만573건을 분석한 결과
- 보수의 연관어에 종전의 경제성장, 진정성, 안보 등의 긍정적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고 '거짓말', '비리' '부끄럽다' '더럽다'는 부정적 단어가 압도적(매일경제, 2017.01.12.)

○ '박근혜정치'와 혁신역량의 한계

- 보수세력은 촛불혁명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보수정치 몰락의 결과가 아니라 몰락의 원인으로 보고 혁신이 아니라 박근혜정치의 복원을 통해 "박근혜 없는 박근혜정치" 지속
- 박근혜정치의 지속을 위해 박근혜의 탄핵마저 부정하고 사면을 요구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 행태

○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사면에 대한 국민의식

-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찬성 71.5%(참여연대, 2017.11.22.)
- 박근혜 탄핵 찬성 77%, 반대 18%(한국갤럽, 2017. 02.28)
- 박근혜 탄핵 현재결정 찬성 76.9%, 반대 20.3%(리얼미터, 2017.03.11.)
- 박근혜 사면복권에 반대 67.6%, 찬성 25.1%(KBS, 2017.04.09.)

○ 자유한국당의 탄핵 부정과 사면요구

- "박 전 대통령이 돈 한푼 받은 게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탄핵 타당했던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황교안, 당대표 후보 TV 토론, 2019.02.20.)
-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습니다.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둬놓고 있습니다."(황교안 당대표, 광화문집회, 2019.04.20.)
- "박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든가, 탄핵될 문제가 없던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모질게 하는지에 대해 탄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탄핵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홍문종, 최고위원회의, 2019.03.20.)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권력이 예전의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나경원, 2019.03.07)

- 박근혜정치의 지속은 냉전체제,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심화 등 보수진영이 주도했던 지난 과거의 어두운 유산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역량도, 시대흐름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혁신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반증
- 지금까지 보수진영은 위기 때 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땀질식 처방일지라도 최소한 ‘천막당사’식 혁신 포퍼먼스로 위기를 돌파해 왔으나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그마저도 포기하고 어떤 혁신의 움직임도 없이 파산한 ‘박근혜정치’에 의존
- 자유한국당이 혁신이 아니라 ‘박근혜정치’를 지속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해체 등 역사적 대격변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조금만 건디면 다시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자만 때문
- 그러나 박근혜정치의 지속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확실하게 파산하지도 않으면서 그럭저럭 버티는, 그야말로 최악”의 길이고 “주류에서 비주류로,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

○ 자유한국당의 주변화 예측들

- “자유한국당이 해체돼야 새 프레임이 나온다.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 미래의 자유한국당은 몇 번의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외면을 받아 소멸되는 운명으로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어쭙잡게 회생시키려 하거나 연명시키려는 시도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안병직, 월간중앙, 2017.7)
- “이제부터 질문은 낡은 보수정당의 자기혁신 혹은 몰락의 가속 혹은 일시적 변신의 가능성으로 모아질 터다. 필자는 지금의 한국당이 자기혁신을 이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한국당이 자기혁신을 이뤄내고 역사적

컴백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한국당은 확실하게 파산하지도 않으면서 그럭저럭 버티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장훈, 중앙일보, 2018. 06.15)

-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50%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믿을 수 없는 몰락이다. 히말라야가 무너지면 에베레스트의 아우라도 사라지듯 중도보수 지지자들이 모두 떠나고 이른바 ‘태극기’로 불리는 지지자들만 남자 대한민국 주류였던 보수의 아우라도 완전히 사라졌다. 보수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했다.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시대가 끝나고 민주당 대 반민주당의 시대가 열렸다. 지금은 민주당 상수의 시대다. 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되고 있다.”(박상민, 경향신문, 2018.10.05.)

- 박근혜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 정치
- 현재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반공과 안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일차방정식이 아니라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거대한 전환기를 넘어 민족사적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의 통합에너지를 모으고 북한과 주변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고 중재해야 해결 가능한 고차방정식
- 이념적 적대감으로 고정지지층인 애국세력을 동원하고, 상대진영의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두 편으로 가르고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 박근혜로 이어져 상속된 전가의 보도, 색깔론을 휘두르며 상대를 적대시 하는 박근혜식 ‘갈등유발정치’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차방정식을 풀 수 없음
-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역사토론회에서도 좌파타령과 막말 일색인 혐오정치, 품격실종정치와 5·18 망언, 반민특위 망언 등으로 공동체가 합의한 역사적 평가를 통째로 부정하면서 지역주의, 이념대결, 반공주의 등 극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비정상적 정치, 망언의 정치에 다수의 국민들은 반감으로 대응

○ 5.18 망언에 대한 국민 의식(리얼미터, 02.13)

- 망언 의원들에 대한 제명 찬성은 64.3%, 반대는 28.1%
- 망언 이후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 포인트 떨어진 25.7%

- 박근혜정치의 상속자들이 보수진영의 주류세력으로 남아 양극화정치를 지속하는 한 새로운 시대를 책임 질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으로 재도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 황교안 대표 전당대회 후보연설 (2019.02.27)

- “문재인 좌파독재가 이 나라를 대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이 정권의 좌파경제정책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내팽개쳤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 좌파독재정권입니다.”

○ 나경원 원내대표(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2019. 03. 12)

- 연설 내내 좌파, 좌파독재, 좌파이념독재, 종북 등의 단어를 14회 이상이나 사용
- 경제정책, 민생분야, 남북관계, 외교 등 모든 문제를 좌파이념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지칭하며 진영싸움으로 몰아감
-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쇄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 5.18 망언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며,

5.18 당시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세계에 알린 독일의 힌츠페터는 북한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고,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발언

-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음을 밝혀야 한다”(이종명 의원)
-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의원)
-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의원)

○ 반민특위 망언

-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합니다.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달라(나경원, 최고위원회의, 2019. 3. 14)

○ ‘수구반동화’와 포용역량의 한계

-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의 도래, 그에 따른 좌우 이념갈등의 종식이라는 전례 없는 시대의 도전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낡은 이념의 껍대를 다시 세워당을 수구반동세력의 이념적 진지로 삼으려는 ‘극단의 정치’를 선택함으로써
- 온 국민의 포괄적 이익 대변, 다양한 이해갈등의 수용, 이견의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통합 에너지를 만들어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포용역량 축적의 기회를 포기

○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발언

- “**이념적 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중요한 진지(陣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 진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107명의 의원에게 그래도 희망을 거는 이유입니다.”(월간조선, 2017.08)

○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고

-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한 선거다. 수구 기득권, 낡은 패러다임에 머무는 보수는 탄핵

당했고 저희는 응징 당했다. 우리가 여전히 수구 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들은 점점 더 우리를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무거운 질책과 경고를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한다... 구태 보수 청산하고 노옥에 찌든 수구 기득권 다 버려 보수 이념의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의원총회, 2018.06.15)

○ 김진태 의원 발언

- “원내대표의 발언이 당황스럽다. 국정농단세력, 적폐세력, 수구냉전세력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자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부정하면 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 보수가 다 죽은 줄 알지만, 아직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콘크리트 우파가 30%** 정도 있다는 게 입증됐다. 더 이상 이들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뒷문 열어놓고 집 나간 토끼 잡으러 쫓아다녔다. 우리 당에 실망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열성 우파가 아직도 많다. 이번엔 홍 대표 체제와 미북회담이 겹쳐서 결과가 더욱 악화됐다. **우리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다.** 조금함을 버리자.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의원총회, 2018.06.15)

-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문제들을 단지 정쟁의 도구 삼아, 반대를 위한 반대, 사소한 것 부풀려 흠집내기, 정책과 대안 없이 정부와 여당의 단기적인 실책만을 기다려 반사이익을 노리는 ‘천수답 정치’ 지속
- 황교안 당대표는 취임하자마자(2019.03.14.)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회, 경제, 민생정책들을 좌파이념편향 정책들로 규정, 이를 저지하고 ‘좌파독재적 만행들’을 파헤칠 것이라고 ‘선전포고’
- 이는 대전환기의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극단화 현상으로, 시대변화를 혁신과 포용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수구냉전의 이념적 근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정치적 극우주의 득세
- 자유한국당이 ‘기승전좌파독재’의 논리로 극단적 이념갈등을 일으키면서 민심을 잃지 않고 다른 정치세력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태극기부대와 우파매체의 포로가 되어 극단 세력을 유지·보존하려는 전략을 지속한다면
- 그 길은 여러 나라의 극좌·극우정당들이 그랬듯이 작은 섬에 고립되어 퇴화하거나 멸종하는 ‘갈라파고스정당’의 길이 될 것임

○ 소득주도성장

-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사회주의정책이라는 이념 공세
 -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찬성' 60% vs '반대' 26%(한국갤럽 2018.08. 31)
 - *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본방향에 찬성 70%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45.8%, 지속 24.2%) vs 반대 22.2%(한국리서치, 2018.10.08.)
 - * 기본방향 유지 55.9% vs 폐지 33.4%(리얼미터, 2018.08.23.)
 - *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본방향에 찬성 48.2%(지속적 추진 28.3%, 부분적 보완 19.9%) vs 정책방향 수정 25.8% vs, 폐기 21.0%(여의도연구원, 2018. 08.30)
- “리얼미터가 여론조작에 가까운 문항을 구성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공개 조작성장, 여론조작 성장이다.”(조원씨앤아이, 2018.10.08.)
-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나경원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2019. 03. 12)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어안이 병병하다. 소득주도성장, **친노조 좌파 경제실험**은 물론 모든 북한 중심 안보정책, **좌파 역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정책은 대부분 **좌파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말씀이 혹시 ‘우파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뜻 아닌지 묻고 싶다.”(나경원, 최고위원회의, 2019.04.02.)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를 멈추게 하려면 한국당이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김무성, <미래 : 대안 찾기> 토론회, 2018.09.04.)
-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을 닫으며 경제는 폭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오르게 될 것”(황교안 대표, 2019.03.18.)

○ 사립유치원법 개정

- 온 국민이 분노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한유총의 색깔론에 동조해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국회 통과 저지
 - * 사립유치원법개정에 찬성 81% vs 반대 14.7%(교육부, 2019.03.03.)
- “김정은도 만나고 전교조도 만나면서 우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분명히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느냐”(홍문종 의원, 19.02.25)

○ 공수처 설치

- 국민 대다수가 고위공직자비리의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을 불신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부패전담수사기관을 설치해 부패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좌파정책으로 매도
 - * 공수처 설치 찬성 87% (한국리서치, 2017. 02) 찬성 86% (조원씨엔아이, 2017.05)
- “공수처는 민변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으로 **좌파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
-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 모르고 찬성하는 것으로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겠다는 것”(홍준표 대표, 2017.11.30)
- “**애국 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 잡혀갈 것”(황교안 대표 2019.03.18.)

○ 선거제도

-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국민의 의견이 높음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좌파의 장기집권 의도라고 매도
 - *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찬성이 58%, 반대 19%(한국리서치, 2018.10.23)
-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황교안 대표, 2019.03.18.)
- “여당과 일부 야당이 다수 독재로 제1야당을 고립하고 **좌파독재**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 한다. 우리가 의원직 사퇴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나경원 원내대표 2019.03.20.)

- 남북, 북미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냉전체제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채 반공안보주의에 사로잡혀 북미관계 개선마저 사력을 다해 저지하는 등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음
-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용세력을 신뢰할 것이며 남북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수구반동세력은 극도의 기피대상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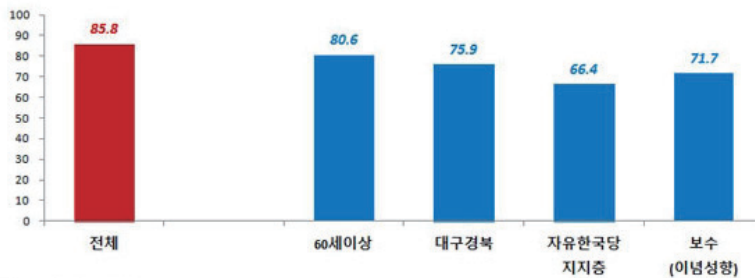
○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 남북정상회담개최 잘한 일 81.5%, 잘못된 일 15.1%(KSUI, 2018.03.18.)
- 남북정상회담 성과 있음 85.9%, 성과 없음 11.3%(KSUI, 2018.04.30.)

-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65.9%(한국리서치, 2018.10.06.)
-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에 공감 59.2%, 비공감 36.4%
- 통일 후 국가 발전할 것에 공감 65.2%, 비공감 33.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여론조사, 2019.03.19.)
- 보수성향의 많은 유권자들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감을 표출

[그림 II-2] 남북정상회담 긍정평가 - 보수성향 응답층(%)

(리서치앤리서치, 2018.04.29.)



○ 나경원 원내대표 방미 발언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하는 분위기에 (한국) 국민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이유로 선부르게 이뤄져서는 안된다”
-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다고 하니 기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파리협정만 생각한다. 파리협정 이후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뉴시스, 2019.02.12)

○ 문정인 특보 발언

-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국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과 만났을 당시 종전선언은 안 된다, 평화선언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들었다. 그런 것들이 워싱턴에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2019년 제1회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2019.03.13.)

○ 자유한국당 지지율 하락 원인분석 보고서

- 자유한국당의 의뢰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작성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자유한국당의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에 자한당의 적대적 대북관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
- “외교·안보 쟁점에 있어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대적 대북관을 견지해왔다는 점이 한국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한국당과의 이념 거리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 “지난 선거들에서 한국당이 강경한 대북·안보 정책을 고수하고 대부분 현안에 대해 합리적, 실용적 정책을 띄우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이다”
- “한국당 지지자들 중 이탈자들은 진보세력에 완전히 편입된 것이 아니라 대안적 보수세력을 찾고 있다. 제1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를 포용성, 사려깊음, 진정성으로 재설정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 보수진영이 수구반동화로 고립화, 주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의 현저한 괴리 현상
- 당심이 민심과 통하지 않고 있으며 그 간극이 작지 않다는 사실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2.28 전당대회와 당대표 선거
- 역대 자유한국당계 당대표 선거 결과에서 민심과 당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국당의 당심은 민심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함

○ 2.28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 당심의 간극

- 한국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는 황교안 52%, 오세훈 24%, 김진태 15%
-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 37%로 1위, 황교안 후보 22%, 김진태 후보 7%(한국갤럽, 2019. 02.22)
-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당 지지자들은 황교안 60.7%로 압도적 1위, 김진태 후보가 17.3%로 2위, 오세훈 후보는 15.4%로 3위.
- 그러나 무당층에서는 오세훈 23%, 황교안 20%, 김진태 5% 순(리얼미터, 2019.02.24.)
- 당대표 투표결과 당원투표에서는 황교안 후보 55.3%, 오세훈 후보 22.9%, 김진태 후보 21.8%

-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0.2%, 황후보가 37.7%, 김진태 후보 12.1%

[표 II-4] 자유한국당 2.28 당대표 선거결과

	당심	민심
황교안	55.3%	37.7%
오세훈	22.9%	50.2%
김진태	21.8%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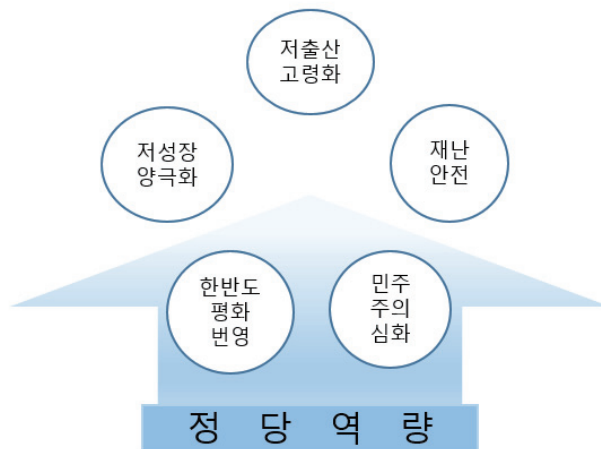
○ 역대 자유한국당계 당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 당심의 일치

- 새누리당 2014년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당대표 선출
-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합산(7:3)에서 김무성 29.6%로 당선. 2위 서청원의원은 21.5%
-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42.6%로 1위, 서청원 32.1%로 2위(리얼미터, 2014.06.16.)
-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40.5%로 1위, 서청원 30.7%로 2위(리얼미터 2014.07.06.)
- 새누리당 2016년 8월 9일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당대표 선출
-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7:3 비율로 합산한 선거결과 40.9% 획득해 당대표 당선
- 당 대표 지지도 당원 대상 조사에서 이정현 의원이 23.8%로 1위
- 전당대회 직전 국민 여론조사에서 12.5%로 1위(한길리서치.2016.07.26.)
- 또 다른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정현의원이 26.6%로 1위(리얼미터, 2016.08.5.)
- 자유한국당 2017. 07.03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당대표선출
- 당원투표에서 72.6%로 1위, 여론조사 49.4%로 1위 합산 65.74%로 당선
- 2위 원유철 의원은 선거인단 19.95%, 여론조사 30.0% 합산 22.96%

○ 정당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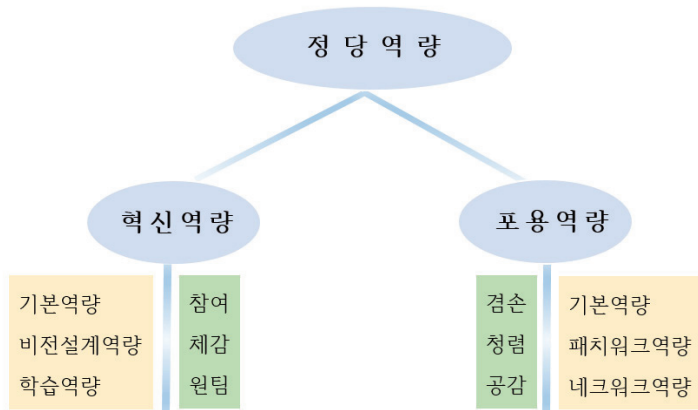
-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역량과 태도가 중요
- 역사적 대전환기를 주도할 중심정당은 혁신역량, 포용역량, 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올바른 실천적 태도가 융합된 정당역량을 갖춰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정당

[그림 II-3] 정당역량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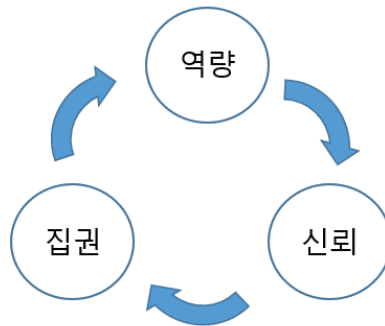
- 혁신역량은 기본역량, 비전설계역량, 학습역량 등 3대 핵심 역량과 참여, 체감, 원팀 등 3대 실천태도로 구성
- 포용역량은 기본역량, 패치워크역량, 네트워크역량 등 3대 핵심역량과 겸손, 청렴, 공감 등 3대 실천태도로 구성
- 혁신역량과 포용역량은 상호 보완적으로 선순환하며 어느 한 역량의 결핍은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켜 정당역량을 침식

[그림 II-4] 정당역량의 구성



- 역량은 올바른 실천적 태도로 발휘될 때만이 지속적인 축적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축적이 있을 때 역량 - 신뢰 - 집권의 선순환이 발생하며 설사 잠시 집권에 실패한다 해도 능력과 태도로 축적된 역량을 국민이 신뢰하는 한 재집권은 언제든지 가능
- 스웨덴 사민당이 긴 시간동안 연속집권과 재집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도 역량 - 신뢰 - 집권의 선순환이 이루어졌기 때문
- 스웨덴 사민당은 1917년 의회 제1당이 된 이래 1921년~1927년, 1932년~1975년, 1982년~1990년, 1994년~2005년, 2014년~현재까지 안정적인 지지율로 단독정부 혹은 연립정부를 구성해 연속집권과 재집권을 이어 옴
- 스웨덴 사민당은 2차대전 이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여 스웨덴을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
- 스웨덴 사민당이 장기간 연속집권과 재집권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민주의대타협'으로 알려진 **포용을 통한 혁신전략**으로 위로는 정치세력들 간의 협치, 아래로는 사회 각 부문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해 사회의 혁신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혁신역량, 포용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로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

[그림 II-5] 정당역량의 선순환구조



○ 혁신의 3대 핵심역량

- 혁신역량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중심정당이 거대한 대전환기를 주도해 국민신뢰를 축적, 지속집권할 수 있는 근본토대
-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문제, 필요와 요구, 즉 “Pain-point”를 발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치의 효과성, 효율성, 반응성, 책임성, 개혁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념과 지식, 정책과 전략, 조직과 활동방식 등을 정당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窮即變, 變即通, 通即久)”는 주역의 말처럼 치열하게 혁신을 추구하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면 국민과 통하고 국민과 통하게 되면 그 정당은 국민에게 자연스러운 여당으로 자리매김
- 혁신역량의 축적을 위해서는 오류를 용감하게 인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철저하게 수정하는 자세가 필요

○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 2018년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

○ 책임 있고 유능한 수권정당

- “지금 한국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모든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정당, 수권 능력 있는 정당은 오직 우리 민주당뿐**입니다. 한국 정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아쉬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원은 사적 이익과 권력 의지가 아니라, 공적 의식과 책임 윤리를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더 개혁적이어야 하고 더 진보적이어야 하며 더 유능해야 합니다.”(이해찬의원 당대표 출마선언문, 2018.07.20.)

- 혁신역량은 **기본역량, 비전설계역량, 학습역량**으로 구성
- **기본역량**은 정당의 역사적 정통성, 가치, 집권 경험과 성과 등에 의해 축적된 혁신의 기초적 역량
-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화와 평화, 번영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 개혁과 변화를 주도해 온 혁신세력으로서 지금까지 축적해 온 혁신의 기본역량, 혁신정통성을 토대로 미래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사적 중심정당
-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 진화”의 정치를 강조한 백범의 혁신사상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민주정치,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국가”를 혁신의 목표로 제시한 신익희의 정신
- “우리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는” 혁신의 태도를 강조한 김대중의 신념, “일 잘하는 정부”여야 한다는 노무현의 호소, “유연하고 유능한 진보”를 향한 문재인 의지를 계승해
- “시대를 통찰하고 국가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혁신정통성 정당
- 기본역량에 대한 근본주의적 태도, 낡은 고정관념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태도로 기본역량을 계승, 발전시켜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중한 창조적 해법을 찾는 유능한 ‘영구혁신 정당(permanent innovation party)’이 되어야 함

□ 혁신의 정통성

○ 김구

-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나 다 그러함과 같이 정치 형태에 있어서도 끝없이 **창조적 진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반만년에 걸쳐 여러 가지 국가 형태를 경험한 나라에는 결점도 있겠지만 잘 발달한 좋은 정치형태도 있을 것이다.”

○ 신익희

- “우리가 밤낮으로 염원하는 첫째 조건으로써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정의 혁신**이 있는 연후에야 (...) 그러나 오늘날 형편을 보면, 국민은 생활고에 허덕이며 못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큰소리로 뭐니뭐니 하는 것은 하나의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한강 백사장 연설, 1956. 5.3)

○ 김대중

- “다가올 21세기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혁명을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웅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종(種)이 태어난 혁명적 사건 이후 이 지구상에는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등 인류사의 5대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제6의 혁명인 ‘**지식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혁명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앞날이 좌우될** 것입니다.”(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 1998. 6. 16)

○ 노무현

- “혁신의 과정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공직사회 혁신의 목표가 몇 가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봉사, 효율, 분권과 자율, 참여 등 네 가지가 제시된 것 같습니다. 국정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봉사, 효율, 분권, 참여, 여기에 이제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투명성이 추가되면 대체로 혁신목표는 충족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묶어서 말하면 일 잘하는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일을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시장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 이것이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제2차 중앙부처 실·국장과의 대화 말씀, 2004년 1월 26일)

○ 문재인

- “우리에게도 일종의 근본주의가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던 민주화운동 시절 우리가 지켰던 원칙이나 순결주의 같은 것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유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확장을 가로막았던 **근본주의에 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유연한 진보, 더 유능한 진보, 더 실력 있는 진보가 돼야 합니다.” (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전문

-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개발과 입법과정을 통해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국가의
희망찬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다.”

- 두 번째 요소인 **비전설계역량**이란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진단해 그 현실을
담아낸 사상을 정립, 그 사상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 국민들이 그 사상과 현실이 연결된다는 것과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필요
한 길이라는 점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
- 비전설계역량은 이념의 틀에 갇혀 현실과 경험에서 배우지 않고 주어진 이념
적 지향에 따라 당위적인 목표만을 제시하는 관념적 맹목성이나 담대한 상상
력으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성찰적 노력 없이 경험과 작은 현실적 이익에만
안주하려는 소인배적 타성에서 벗어나
- 과거에서 배우고, 민심에서 현실을 깨닫고, 현실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적확
한 통찰력과 담대한 상상력으로 시대에 적응하는 혁신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
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
- 협소한 아젠다나 이해집단들의 요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류의 가치 (mainstream
values), 국가적 자긍심,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고
-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변화될 국민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해 국민의 공감대와 참여적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는
비전만이 생명력 유지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우리 정부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APEC 정상회의의 발언문, 2018.11.18.)
- 우리 앞에 놓인 여건과 상황들은 과거 북구와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를 만들던 당시의 인구, 산업, 고용구조, 높은 사회 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해 주십시오(포용국가전략회의, 2018.09.06)

- 세 번째로 **학습역량**은 시대를 관찰하고 문제를 탐구하여 상황과 때에 적절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영구혁신의 토대가 되는 역량
- 불확실성의 증대, 엄청난 속도의 변화, 복잡한 난제(wicked problem)의 증가 앞에서 편견과 관성에 사로잡혀서는 현실을 혁신할 수도, 미래를 포용할 수도 없음
- 혁신은 가치와 태도를 넘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혁신해야 하고 자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습역량이 필요
- 학습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정당은 사태를 보는 눈이 흐리고, 반응은 더디며, 문제의 핵심을 놓치거나 문제점을 발견해도 관심이 없거나 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당으로 전락
- 당의 가치, 노선, 정책 등에 관한 교양을 높이고 민주역량과 정책능력, 정치 실무능력 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과 교육으로 정치적 소양과 업무적 소양을 높여
- 당원 모두가 정책문제를 발견하는 문제 탐색자(explorer),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창조자(ideator), 정책대안 형성 및 설계자 (design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때로는 잘 설득할 수 있는 정책 확산자(diffus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연구기관과 연수원 등 당의 학습기관을 당원교육과 시민교육 등 당 학습역량 축적을 위한 전진기지로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당원 학습조직 건설, 학습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당의 학습역량을 축적
- 학습역량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외부수혈로 유지되는 리크루팅 정당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 인재를 모아서, 실력을 키우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데 능한 학습정당으로 혁신

○ 이해찬 대표

- “우리의 민주연구원 정책영역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연수원도 만들어서 우리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같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이해찬 당대표후보 중앙위원회 연설, 2018.07.26.).

○ 혁신의 3대 실천태도

- 혁신역량은 참여, 체감, 원팀의 실천을 통해 축적 가능
- 혁신의 올바른 태도는 혁신의 이유도, 목표도 국민, 혁신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어야 하며 국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국민혁신 시대를 이루겠다는 자세와 마음가짐
- 당원과 국민이 당의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활력 넘치는 혁신이 가능
- 당원과 국민이 당의 혁신에 공감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좌우파의 퇴행적이고 낡은 정치문법을 일신하고 새롭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들에 단순하고 양극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혁신의 지혜를 총결집시킬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포용적 혁신의 구조적 토대를 갖추 온 국민이 혁신의 동반자, 수행자이자 수혜자로서 참여의 기쁨과 혁신의 성과를 누리게 하고 많은 인재들이 몰려 당과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혁신문화 창출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개혁도 저 문재인이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노무현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사)

-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만이 정당역량으로 축적
- 혁신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혁신역량에 대한 신뢰와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끌어 낼 수 있음
- 혁신의 비전과 구체적 혁신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에 적중하는 혁신의제를 설정해 실용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스몰스텝과 스몰딜(small deal)의 혁신전략** 필요
- ‘모란꽃은 보기에만 좋지만 실속은 없고, 대추꽃은 비록 작아도 열매를 맺듯이’ 국민에게 민감한 ‘작은’ 이슈에서 ‘작은’ 승리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케함으로써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음
- 국민체감을 높이는데 능력과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실함**. 국민들은 성과를 통해서만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이루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체감
- 끈기와 항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성실한 태도가 성과는 물론 체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 여론조사 등에서도 정책적 성과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정부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확인

○ 성실한 태도의 중요성

- “저는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일과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사랑에 있어서도 성실한 마음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성실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 변함없이 성실한 것, 그것이야말로 결실을 이루는 가장 큰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문재인, 문재인이 드립니다. 2012, 74쪽)

- “정치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는 게을리 하지 말고, 정사를 처리할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공자, 논어 자로, 12편)
- 자로가 정치에 대해 묻자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몸소 열심히 일하거라” “게을리 함이 없어야 한다.”(공자, 논어 자로, 13편)
-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다. 만약 이 세상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도 불가능한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고 모든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2013. 후마니타스)
-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2019년 4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첫째 주에 비해 6%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난 가운데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3%)과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3%)는 항목이 가장 앞섰고, 이어 ‘외교를 잘 함’(10%), ‘강원 산불 진화 대응’(9%) 순(한국갤럽, 2019.04.12)

- 국민의 이익에 작은 것이란 없다는 태도로 큰 목표보다 사소하지만 피부에 닿는 생활밀착형의 스몰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
- 작지만 빠른 걸음으로 한 발 앞서 혁신의 과제, 이슈들을 선점, 주도해 꾸준히 실행

○ 문재인 대통령

-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혁신성장 전략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2017.11.28)
-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신년기자회견, 2019. 1.10)

○ 메르켈 총리의 스몰스텝(small step) 전략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혁신전략으로 스몰스텝전략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활용
- 스몰스텝전략은 심각하고 복잡하고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었던 원동력
- 스몰스텝 전략을 위해서 메르켈은 이전 정부 정책을 명확하게 평가해 계속 유지할 정책과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 설계를 우선함

- 메르켈은 슈뢰더의 사회개혁프로그램 ‘어젠더 2010’을 지속해 좌파들의 저항을 줄이면서 독일경제를 혁신시킬 동력으로 삼음
- 집권 기간 추진한 고용 유연화, 시장 친화 경제 개혁 등 경제정책과 EU, 기후변화협력 강화, 삼각외교 구축 등 대외관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던 원동력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기부양을 거부하고 개혁 등을 유지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

-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당의 단결과 통합을 이뤄 갈 수 있는 **팀워크 능력**
- 당 전체가 집권과 혁신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당 전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신뢰기반을 구축한 안정적 **원팀**일 때 당의 혁신역량 축적 가능
- 혁신은 늘 분열과 갈등의 계기. 당 혁신의 목적과 방식이 패권과 배제일 때 혁신은 늘 저항에 부딪히고 분열과 갈등의 씨앗
- 국민의 이익과 당의 집권을 위한 포용적 방식의 혁신만이 이기는 혁신이며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이고 권위주의적 원팀이 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전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신뢰를 쌓는 유기적이고 포용적 원팀만이 이기는 혁신
- 이념과 정체성 논쟁이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혁신 논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당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열린 혁신, 일상적 혁신으로 불안정의 요소인 당파와 개개인의 혁신 역량의 경쟁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동시에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당의 혁신역량 극대화
- 술선수범, 선당후사, 소통을 통한 신뢰축적으로 혁신의 문화적 기반을 갖춰 당 전체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혁신을 이룰 때 이기는 혁신이 가능

○ 문재인 대통령의 ‘이기는 혁신’

- “우리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절박하게 말합니다. 변화를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와 혁신, 우리당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올바르게 봐야합니다. 우리당을 이기는 정당,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혁신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기는 혁신’으로 가야 합니다.” (이기는 혁신-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재인 기초연설)

○ 포용의 3대 핵심역량

- 포용역량은 다양한 이해갈등을 수용하고 이견을 조화시켜 새로운 통합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
- 대전환은 냉전체제로부터 파생된 이념적 좌우프레임을 다중 사회를 바탕으로 한 포용·배제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그 때 포용역량은 고도의 패치워크사회를 주도할 결정적 토대
- 포용역량은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배제’를 사람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포용민주주의, 포용사회, 포용성장으로 전환시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역량
- 포용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소수자의 정치적 의사를 포함하여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 포용사회는 개인과 집단이 사회에 참여하는 조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역량, 기회, 존엄을 보장하며
- 포용성장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모두에게 번영의 몫을 공정하게 분배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구현
- 포용정당은 정치, 사회, 경제 영역의 갈등과 배제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따뜻한 정당으로 사회적자본의 축적 통해 진영을 넘어 안정적인 ‘새로운 다수파(new majority)’ 형성
- 포용역량은 **기본역량, 패치워크역량, 네트워크역량**으로 구성
- **기본역량**은 사람중심사상을 당의 가치와 이념, 정책으로 실현시켜 온 포용정 통성 역량
- 더불어민주당은 자주독립과 민주이념의 헌법정신을 구현해온 당의 정통성,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개혁성, 남북화해를 위해 노력해 온 포용과 화해의 전통과 경험, 성과를 통해 따뜻하고 믿음직한 중심정당으로 발전할 기본

역량 축적

- 더불어민주당이 지닌 포용의 기본역량은 대전환의 시대에 독립투쟁의 역사, 산업화, 민주화 등 모든 역사적 경험을 발전적, 긍정적으로 종합해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끌 수 있는 역사적 정통성
- 더불어민주당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좌우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백범의 통합정신과 ‘서로 다른 것에서 배워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패치워크정신
- “모두가 잘 사는 국가”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신익희와 김대중의 사람중심철학
-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하는 협치에 대한 노무현의 꿈과 “합의, 치유와 화해, 통합”의 포용민주주의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을 계승해
- 사람중심의 포용정통성을 토대로 원칙 있는 협치와 사회적대타협을 추구해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갈등을 포용과 연대, 화합과 상호부조”를 통해 극복하려는 포용정통성 정당

□ 포용의 정통성

○ 김구

- “내 가슴속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직 조국의 독립과 동포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것이며, 한 발 앞으로 나가 우리 동포가 세계 인류와 함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번영으로 좌익과 우익 양쪽 모두가 같이 살아남는 세상을 위하여 캄캄한 밤길 찬바람 헤치며 나갈 뿐이다.”(백범일지)
- “남의 나라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고 내 나라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나라에 독특한 좋은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도 세계 인류의 문화와 문명 발전에 보태는 일이다.”(백범일지)

○ 신익희

- “모두가 잘 살자는 것이 지상의 목적이므로 국가는 그 개개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 이 가운데 우리들이 똑바로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나라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개인 때문에 나라’라는 이론이다. (...) 인간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과오다. 인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해공신익희,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92. 313쪽)

○ 김대중

- “나는 21세기의 진정한 인권 개념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해야만 종교, 사상, 인종, 성에 기인한 차별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범세계적 문제로 등장한 테러, 분쟁, 빈곤, 환경오염, 대량살상무기 등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1998. 12. 8)

○ 노무현

-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적어도 논리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절충을 해서 타협해야 합니다. 타협으로라도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야 합니다.”(연세대학교 초청 연설, 2004.05.27)

○ 문재인

-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광복절 72주년 기념사, 2017. 8. 15)

○ 더불어민주당 강령전문

-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삶의 기본선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통합사회를 구현한다. 계층, 지역, 세대, 성별 갈등을 포용과 연대, 화합과 상호부조의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조정하며 극복해 나간다.”

- 두 번째 요소인 **패치워크 역량**은 밖으로는 국민이익을 중심으로 정치세력들의 원칙 있는 협력을 주도하고 안으로는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해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핵심역량

- 패치워크(patchwork) 작업이 어떤 형질 조각들도 버리지 않고 포용하고 조화시켜 새롭고 더 큰 제품을 만들어 내듯이 당의 정통성 위에서 개방적이고 소통적 태도로 포용과 수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당의 정체성을 새로운 형태로 확대재생산, 보다 복합적이고 보다 세련되고 보다 고차원적인 당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함
- ‘태산이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태산이 되고 하해가 미미한 한줄기 물도 가리지 않아 하해를 이루었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심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주의나 환원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 밖으로는 극단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과 개방적 태도로 대화하고 타협, 협력해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중시하는 화이부동의 태도로 더 큰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역량

○ 정체성정치를 넘어

- 정체성정치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정치 혹은
- 인종, 성별, 지역, 성적지향 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구성해 그들의 이익과 관점을 대변하는 정치
- 정체성정치는 연대, 연합 등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합을 불가능하게 해 소수파정치로 전락할 가능성
- 사회적 균형의 관점에서 소외, 배제, 차별 받는 집단,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 하되 공동의 이익과 목표에 모든 국민이 국민으로서 호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의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고 낙오할 위험에 처하지 않는 미래의 국가에 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포용역량은 정체성정치를 넘어 공동의 미래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세력,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패치워크 방식으로 포용하여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는 집권역량

- 셋째, **네트워크 역량**은 복잡-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개인 등을 연결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역량

- 단일 정당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이 필수
- 또한 까다로운 스마트(SMART) 유권자들이 부상하고 있고 이들을 하나의 이념, 빅 이슈, 정체성정치로 이루어진 단일한 정치적 전선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 다양한 선호, 지역, 직능, 이슈, 세대를 아우르는 초연결 네트워크 역량만이 스마트 유권자들의 지지획득 가능

○ 스마트유권자

- 하나의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은 채 여야, 좌우를 넘나들고(Swing), 정치적 극단주의 거부(Middle), 자신 안에 서로 상충적인 이념을 수용할 정도로 유연하며(Ambivalence), 경제적 상황이나 공정과 정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Responsive) 유권자들

- 네트워크 역량을 지닌 정당은 권력과 권한을 독점하는 정치 생태계의 포식자가 아니라 플랫폼 정당으로서 분권과 분산으로 정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 다양한 시민, 계층조직, 이익단체, 풀뿌리 조직, 개인 등을 조직하고 연결해 수평적, 협력적 관계 아래서 대의, 조정, 참여, 의제형성 기능을 공유하는 관계정당(relational party)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지자를 광범위하게 결집시켜야 한다. 유권자와 시민은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당은 네트워크 밖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시민의 삶을 정당 네트워크에 결집시켜야만 하고, 이것은 당이 기반과 참여의 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제5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심포지엄, 2014.09.25.)

○ 포용의 3대 실천태도

- 포용역량은 겸손, 청렴, 공감의 태도로 축적 가능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겸손은 가장 큰 정치적 미덕이었으며 자만과 오만은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파멸의 요인
- 힘과 대결의 시대, 이념적 패권의 시대, 승자독식사회를 넘어 서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포용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생활 속에서 겸손을 실천해야 함
- 겸손은 흠처럼 모든 생명을 품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태도로 온 국민을 아우르려는 중심정당이 지녀야 할 근본적 태도

○ 겸손의 의미

- 겸손의 영어 단어인 humility의 라틴어 어원은 humus. humus는 흙을 뜻하는 것으로 하잘 것 없다는 뜻도 되며 흠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음.
- 김수환 추기경은 '흠처럼 겸손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

- 겸손은 혁신의 원동력. 겸손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며 그 불완전함을 채우고 극복하기 위해 지속 혁신 추구
-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갈등과 대립을 풀 수 있는 포용정치의 결정적 요소이며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를 맺고 신뢰와 협력을 가능케 해 유능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정당이 지녀야 할 중요한 태도
- 겸손한 중심정당은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 민심제일주의,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 포지셔닝하고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추구해 여민동락과 국민희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잘못된 일이나 실패를 모두 남 탓으로 돌리는 소인배 정치가 아니라 모든 일의 책임과 문제를 먼저 자기에게서 찾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는 대인배 정당
-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지적한 휴브리스(hubris 오만)를 가장 경계해야 함

- 토인비는 권력을 잡은 이들이 몰락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혁신으로 성공한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방식을 절대화하고, 추종자들에게 복종만을 요구하며, 도덕적 균형감과 판단력을 상실하는 ‘휴브리스’로 지적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통령 취임사)
- “이제는 정말로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정말로 국민을 받드는, 그리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수석보좌관회의, 2018.06.18.)

○ 지식적 겸손(Intellectual Humanity)

- 2000년 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석학들에게 인류가 20세기를 반성할 점과 21세기에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대다수 석학들인 지식적 겸손(Intellectual Humanity)를 꼽음

○ 오바마

- 오바마는 취임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재임기간 중 휴브리스(자만)를 알고 이를 끊임없이 경계하려고 노력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발언

○ 동서양에서 강조하는 겸손

- “승리의 자만에 안주한 군대는 반드시 패배하고, 겸손한 태도로 훈련한 군대는 반드시 승리한다(교병필패驕兵必敗, 겸병필승謙兵必勝)”
- “천도天道는 가득한 것을 덜어내고 겸손한 것을 더해주며, 지도地道는 가득한 것을 변하여 겸손한데로 보내주고, 귀신鬼神은 가득한 것에 화를 주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며, 인도人道는 가득한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겸손이란 높고 빛나며 나직해도 넘어질수 없는 것이니, 군자의 도道이다.”(주역周易)
- “스스로 내보이려 알기에 밝게 드러나고, 스스로 옳다 여기지 않기에 옳음이 나타나며, 스스로 공을 이루려 알기에 공이 있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기에 오래간다(不自見故明 不自是故彰 不自伐故有攻 不自矜故長)” (노자)
-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마태복음 20장)

- 두 번째 포용의 실천태도인 **청렴**은 올바름이며 정치의 근본(政者正也정자정야)으로 국민을 공경하고 섬기는 애민정신에서 나오는 태도
-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면 능히 청렴할 수 있으며 청렴하면 대중이 신뢰하고 대중과 통하게 됨
- 권력의 비리, 부패 등 국민이 싫어하는 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당이 과감한 결단과 엄격한 처리로 솔선수범하고 일상의 작은 부패들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척결하자고 요구할 때만 당심과 민심을 얻을 수 있음
- 청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업적으로 평가받고 격려받고 널리 알려지는 생태계를 조성해 청렴의 노력을 고취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정치를 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자정야, 정치는 바른 것이다’라는 말이다. 바른 정책을 행하고, 정의를 따르고, 사사로이 흐르지 않고, 공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정자정야가 아니겠나. 국가가 정의롭고 공정할 때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취임 1주년 인터뷰, 2018.05.08.)
- “부패와 맞서기 위해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2018.11.20.)

- 세 번째, 포용역량은 **공감과 소통의 실천태도**를 통해 축적
- 공감은 상식(common sense). 선명성이나 도덕적 우월감을 토대로 한 존재감의 정치, 엘리트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불만과 불행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의 민생문제 해결,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보통사람, 상식적 다수가 공감하는 상식의 정치
- 공감의 정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치. 이념의 언어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적대와 대립, 갈등과 투쟁이 일상화된 진영정치를 넘어 상식이 통하고 상식의 보편성으로 정치적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태도

- 공감의 정치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의 정치.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의 교감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民心)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과 태도
- 공감의 정치는 애민의 정치. 부적절한 말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반감의 정치,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무감의 정치, 허황된 공약들과 약속불이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불신의 정치를 넘어
-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치유의 정치, 늘 국민을 존중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친절의 정치, 모든 국민의 불만과 불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온 국민 섬김의 정치

○ 문재인 대통령 발언

- “일반 백성들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새겨야 한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도 본받아야 할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2018.10.09.)
-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우리 한글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공원, 수목원, 등산로, 탐방로 등의 표지판 보면, 전부 무슨 목, 무슨 과, 무슨 원산지, 이런 식으로 국민이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무 용도가 뭐며,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이와 친절하게 하는 김에 국민에게 정겹게 잘 알려주는 식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영어 용어, 여러가지 조어를 보면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한글로,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만약 그런 용어가 없거나 우리 말로 옮기기 어렵다면 하다못해 뜻, 각주라도 달아주면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국무회의 2018.5.29.)
-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내가 생각했던 공감이 얼마나 얇고 관념적이었는지 새삼 느꼈다. (...) 정치 같은 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제대로 공감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게 대해 더 공감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페이스북, 2018.11.18.)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 더불어 민주당의 길